

#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1년 가을호  
Vol. 28



#### 국가회계 동향

영국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  
재정위험관리 및 재정상태표 관리를 중심으로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1 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재정통계 동향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공익법인회계 동향

「공익법인법」 개정을 통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예정

# CONTENTS

## 2021년 가을호

Vol. 28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재정통계



#### 국가회계 동향

- 04 영국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  
재정위험관리 및 재정상태표 관리를 중심으로
- 18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소개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36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38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39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제2~10차)
- 41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 재정통계 동향

- 46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53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55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재정분석
- 60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VOL. 28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1년 가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 공익법인회계 동향

- 70 「공익법인법」 개정을 통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예정



## 세미나

- 102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 오피니언

- 74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 센터 동향

- 82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89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 안내  
 92 「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  
 95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96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98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최종보고회



## 공지사항

- 109 뉴스레터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회계 동향



- 영국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  
재정위험관리 및 재정상태표 관리를 중심으로
-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소개

## 01 영국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 재정위험관리 및 재정상태표 관리를 중심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도 연구과제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공공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위험 관리, 효율적인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요구와 투명한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 실정에 발맞추어 센터는 ‘재정위험 식별 및 관리’와 ‘자산·부채 관리’ 측면에서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활용되는 국가별 모범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정책 제안을 하고자 2021년 해외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해외공동연구는 7개국 연구 참여국(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국가회계 재정통계』는 영국을 시작으로 국가별 연구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 가. 연구 개요

영국 사례의 담당 연구자인 Manj Kalar는 25년 이상 공공 부문에서 일했으며, 그녀의 경력은 주로 영국 중앙 정부 기관의 발생주의 도입과 통합결산서 연결에 집중되어 있다. 다수의 국가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s)의 실무 도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 영국회계사(FCCA), 공인재정회계사(CPFA), Prince 2 Practitioner
- 공인척허회계사협회(ACCA), 공공부문 팀장('16~'17)
- 공인회계사협회(CIPFA), 중앙정부 & 재무관리, 기술 매니저('11~'16)
- 영국 지방자치부,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하부연결 매니저('07~'11)

연구자는 영국의 발생주의 회계도입 개요와 함께 영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의 배경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와 “정부 재정상태표 관리”의 챕터로 구성된다.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관리의 주요 내용은 「재정위험보고서」와 그 작성 과정, 예산책임청(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의 영향 등의 분석을 포함한다. 특히 예산책임청의 영향으로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영국투자공사(UKGI: UK Government Investments)의 우발부채 중앙관리(CLCC: 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 「2021 재정위험보고서」를 담고 있다.

“정부 재정상태표 관리”에서는 발생주의를 활용한 자산·부채 관리에 대해 다루며,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의 역할, 정부의 재정상태표 관리, 「재정상태표 분석 보고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역할로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감사원의 평가와 제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감사원의 평가보고서는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 충당부채, 우발부채, 정부보증, 정부차입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대한 회계감사원장 제안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회계 재정통계』는 분석대상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센터에서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한다.

## 나.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 1) 「재정위험보고서」(by. OBR, 예산책임청)

재정위험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위험이란 공공부문 지출, 수입, 차입 및 채무에 대한 향후 중기 5년 및 장기 50년 예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sup> 재정위험보고서는 2017년 최초 발간 시 57개의 상이한 정부의 중·장기적 위험을 식별하여, 이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거시경제, 금융부문, 수입, 기초지출, 재정상태표, 채무이자). 2년 뒤인 2019년에 발간된 「재정위험보고서」에는 2017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위험 및 정책위험이 추가되었다. 또한 발생주의 정보기반 재정위험 관리 및 모니터링의 개선사항으로 우발부채 관리 개선, 재정상태표 작성의 투명성 제고, 통계청 연계 학자금대출 회계처리 개선을 통한 재정환상 해소 등이 수록되었다.

올해 발간된 「재정위험보고서」는 평상시에 직면하는 위험이 아닌 경제 및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예외적이고 시스템적인 충격에 초점을 맞추어 대폭 개편되었다. 2021년 개편사항으로 위험의 유형을 ① 코로나 팬데믹 영향 ② 기후변화(2050 탄소제로) ③ 공공채무로, 기존 8개 범주에서 대폭 수정했다. 이는 기존 「재정위험보고서」의 포괄적 주제와 방대한 양(300페이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과제는 2019년 「재정위험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다음의 표와 같이 재정위험 분석 대상은 연도별로 신규 추가, 삭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 중기예측은 「경제·재정전망보고서」, 장기예측은 「장기지속가능성보고서」를 기반으로 함

**표1**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연도별 분석대상 변화

활용된 발생주의 정보	2017 (313p)	2019 (293p)	2021 (233p)
-	1. 거시 경제적 위험	1. 거시 경제적 위험	-
-	2. 금융부문 위험	2. 금융부문 위험	
-	3. 수입 위험	3. 수입 위험	
-	4. 기초지출 위험	4. 기초지출 위험	
WGA (재정상태표 기반)	5. 재정상태표 위험	5. 재정상태표 위험	(확대) 공공채무
	6. 채무이자 위험	6. 채무이자 위험	
-		(신규) 정책 위험	-
-		(신규) 기후변화 위험	기후변화 위험
-			(신설) 코로나 팬데믹

출처: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OBR), Fiscal Risks Report 2017, 2019, 2021, [https://obr.uk/docs/dlm\\_uploads/Fiscal\\_risks\\_report\\_July\\_2021.pdf](https://obr.uk/docs/dlm_uploads/Fiscal_risks_report_July_2021.pdf), <https://obr.uk/frr/fiscal-risks-report-july-2019/>, <https://obr.uk/frr/fiscal-risk-report-july-2017/>

구체적으로 2019 「재정위험보고서」에서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식별된 재정위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관련 주제	사례
<b>재정 상태표 위험 요인</b>	재정상태표 거래: 정부 채무발행(금융자산 매입, 민간부문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및 로이드 은행그룹사 주식 매입</li> <li>▪ 브리티시 스틸에 2018년 유럽연합 탄소배출부채 요건 충족을 위한 용자</li> </ul> 재정상태표 이전: 민간의 자산과 부채가 공공부문에 포함되거나 분리되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yal Mail의 누적된 연금부채 및 관련 자산을 정부가 인수(2015년)</li> <li>▪ 영국 주택협회 이슈: 2015년 공공부문으로 편입, 2017년 공공부문에서 제외, 민간부문으로 재분류</li> </ul>
<b>재정 상태표 위험</b>	기존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 미헤지 외화보유액(1/3에 해당)의 환율변동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외금융: PFI·PF2, 주택협회 재분류</li> <li>▪ 민간투자사업(PFI·PF2)의 실제 부채규모가 정부 재정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음</li> <li>▪ 주택협회를 민간으로 재분류하여 주택 관련 차입(연평균 30억파운드)과 지출 채무(약 700억파운드)가 정부 재정상태표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됨</li> </ul>
<b>공공 부문 무형 자산</b>	지출을 대체하는 재무적 거래: 학자금대출의 보조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을 보조금에서 용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출과 적자가 감소</li> </ul> 공공부문 무형자산 과소평가 우려: 전체 자산의 2% 수준에 그침 <p>정부는 지난 20년간 SPINTAN(Smart Public INTANGibles) 프로젝트를 통해 연수프로그램, R&amp;D 등 공공부문 무형자산을 측정하고 관리하려고 노력 중임</p>
<b>채무이자 위험</b>	채무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민감도: <p>신규 채무 발행규모,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만기구조, 물가연동국채 등이 영향 미침</p> 자산매입프로그램(영란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활동): <p>정부의 차입비용은 낮추나 공공부문 채무의 평균만기 단축, 금리변동 노출증가로 위험요인</p>

## 2) 예산책임청의 영향

예산책임청은 설립된 이래 짧은 시간 동안 위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재정위험의 체계적인 식별과 측정 그리고 정부가 수립한 세부 경영전략 정의가 불과 몇 년 만에 다양한 재정 위험 완화 접근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촉발시켰는지 보여준다(OECD 2020). 예산책임청의 2019년 「위험관리보고서」상 재정위험의 모니터링과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체계화되었다.

### (1) 「정부의 최후 보증인 역할」<sup>2)</sup> (by. HMT, 재무부)

(발간배경) 영국은 2017년 우발부채 승인체제<sup>3)</sup>를 도입한 후 신규 우발부채를 관리해 왔으나, 기존의 누적된 우발부채 총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sup>4)</sup>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3월 일회성으로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발부채 관리 개선을 위한 4가지 목표와 10가지 정책제안을 포괄하며, 최후 보증인으로서의 정부 우발부채는 지급보증과 명시적 정부 보험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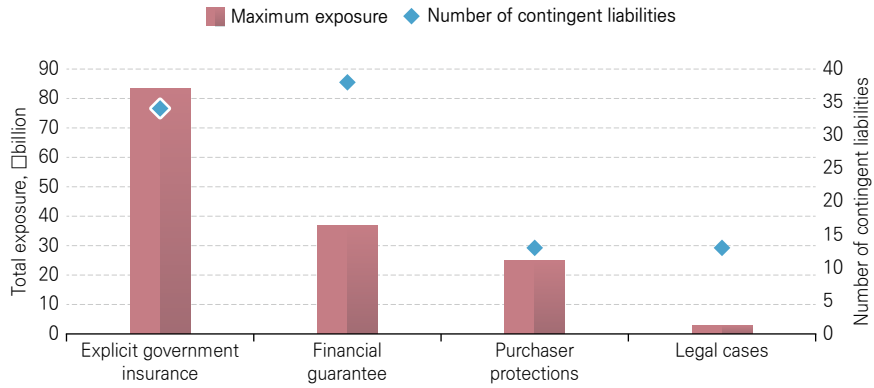
지급보증은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부상환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British Business Bank에서 운영하는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 제도가 있다. 명시적 정부 보험은 질병으로 가축을 도축할 때 정부가 보상하는 사례와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NHS(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임상 과실 청구 시 정부가 비용을 충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외 법적소송, 구매자 보호(자간 매각 시) 등 기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는 본 보고서에서 규정하는 최후 보증인으로서의 정부의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가회계재정통계』 2021년 3분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3) 신규 우발부채 평가의 5가지 기준: 근거, 규모(노출액), 위험과 수익률, 위험관리와 완화, 재정 여력, 300만파운드 이상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하며,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4) 「우발부채 승인체제: 지침」, HMT, 2017년 7월; 「재정위험 보고서」, OBR, 2019년

**그림1** 영국의 신규 우발부채 현황(2017~2019년)



출처: HMT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에서 설정하는 4대 목표로는 ① 위험 정량화 및 가격책정 전문성 향상 ② 납세자 부담 위험에 대한 보상개선 ③ 위험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설정 ④ 위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무부, 부처, 민간부문 간의 손실 분담 명확화가 있다.

아울러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10가지 제안	
<b>전문성 향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1) 보증과 보험에 대한 가격 책정, 발급,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li> <li>▪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중앙기관 수행</li> <li>▪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 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포트폴리오 구성 등)</li> <li>▪ (제안 4) 우발부채 보유액 감독 개선</li> <li>▪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정기보고 등)</li> </ul>
<b>보상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6) 정부가 보험 보증을 제공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받음(손실충당 수수료)</li> </ul>
<b>위험감소 인센티브 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7) 정부 부서가 유사한 위험 유형과 수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 개선(예산체제에 우발부채 예상원가를 반영)</li> </ul>
<b>손실부담 명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8) 재무부, 부처, 민간부문 간 손실 분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부담 개선</li> <li>▪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 체계 구축</li> <li>▪ (제안 10) 현 우발부채 보유액 고려, 기존 위험관리 범위 확장</li> </ul>

출처: HMT, Government as insurer of last res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as-insurer-of-last-resort-2>

## (2)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sup>5)</sup>) (by. UKGI, 영국투자공사)

(출범배경) 재무부가 발간한 「정부의 최후 보증인 역할」에서 제안한 ‘중앙기관 구축’을 반영하기 위해 영국투자공사(UKGI) 내 우발부채 전담부서가 마련되었다.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설립 목적은 우발부채에 대한 정부 전반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 해당 부서는 2017년 도입된 우발부채 승인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부계리사부(GAD)에서 파견된 보험계리사, 신용 위험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부서는 2021년 4월 최초 서비스를 개시한다.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주요 업무 1: ① 위험 정량화 ② 위험 완화 통합 ③ 신규 우발 부채 분석  
= 각 부처와 협력하여 위험을 정량화하고 위험 완화를 통합하며, 정부에 이전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프리미엄을 부과하기 위해 신규 우발 부채 분석
- 주요 업무 2: 기존 우발부채 검토  
= 위험 관리 및 우발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및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존 우발부채 검토
- 주요 업무 3: 지침 제공 및 모범사례 공유  
=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전반에 지침 제공 및 모범사례 공유

출처: UKGI,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troducing-the-ukgi-contingent-liability-central-capability>, <https://www.ukgi.org.uk/what-we-do/contingent-liabilities/>

## 다. 정부 재정상태표 관리

### 1)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은 영국에서 감독자로서 정부 재정상태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상태표(자산·부채) 평가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기여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 재정에 대한 주요 위험 중 일부를 조사하

5) CLCC(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city)

는 일련의 보고서로서 금융자산·투자자산, 정부차입, 연금,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을 주제로 정부의 잠재적 위험과 위험 관리방식을 평가한다.

### (1)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2016년 6월, 일회성 발간)

(현황) 영국 정부의 장·단기 투자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기 상이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금융자산은 정부가 보유한 총자산 중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3월 31일 기준 총자산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72억파운드의 수익 창출).

(자산관리) 정부는 영국투자공사(UKGI), 영국금융투자공사(UKFI), 영국재무투자공사(ShEx) 등을 설립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기관들의 전문성으로 인해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권고사항) 은행, 주택 및 학생 금융부문에서 정부 금융 자산의 규모와 집중을 우려했으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관리 전략과 매각 수익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같이 평가가 어렵고 불확실성 높은 자산의 관리와, 금융위기 결과로 인수한 부실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 「충당부채, 우발부채, 정부보증」(2016년 6월, 일회성 발간)

(현황) 결산보고서(WGA) 최초발간 이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증가했으며,<sup>6)</sup>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변화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위험유형) 관찰된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 에너지 정책 관련 위험(NDA 원전해체충당부채 등) ② 법적 공방(NHS 의료과실소송충당부채 등) ③ 정부의 시장 개입(인프라 건설지원을 정부보증 등) ④ 최종 보험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금융부문 정부보증 등)

(권고사항) 감사원은 정부가 부채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 특히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소송비용 최소화,

<sup>6)</sup> 충당부채: 2/3 증가, £1,050억(2009~10년) → £1,750억(2014~15년)  
우발부채: 85% 증가, £411억(2009~10년) → £760억(2014~15년)

부채 포트폴리오 관리, 경제적 충격의 영향 제한, 통합결산서 공개 강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 부채에 대한 지침 개발을 제안했다.

### (3) 「정부차입」(2017년 11월, 일회성 발간)

(현황) 통합결산보고서(WGA) 최초 발간 이후 차입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sup>7)</sup> 국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재정 관리의 어려움 또한 증가했다. 현행 차입수요 관리 프로세스는 우수하나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가채무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 국민저축투자청 NS&I (National Savings & Investments) 등이 일관된 정책하에 장기적으로 자금조달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획된 자산 매각 지연으로 인해 DMO에 2016~17년 마지막 분기 동안 210억파운드를 추가로 조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EU 탈퇴와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해제 등 공공 재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수연계부채 비율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위험에 직면했다고 평가된다.

(권고사항) 납세자의 요구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정부 재정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부채를 모두 고려한 순금융부채(PSNFL)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처, 예산책임청, 재무부 내 재정위험 및 재정상태표 분석 기능의 통합과 차입부채 포트폴리오 구성 시 지수연계부채의 비중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출처: NAO, <https://www.nao.org.uk/report/evaluating-the-government-balance-sheet-financial-assets-and-investments/>, <https://www.nao.org.uk/report/evaluating-the-government-balance-sheet-borrowing/>,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6/06/Evaluating-the-government-balance-sheet-provisions-contingent-liabilities-and-guarantees.Summary.pdf>

상기 보고서 외에 감사원은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선, 재정위험 관리에 통합결산서의 활용 독려,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를 위해 통합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원장 보고서 2017~18에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7) 차입부채: £1조 2,610억(2015~16년)로 전체 순부채의 63% 차지  
이자비용: 61% 증가, £1,379억(2009~10년) → £2,220억(2015~16년)

## 2) 재정상태표 관리

2017년 예산 보고서에서 재무장관은 재정상태표 분석을 공표했다. “부동산 최적화, 투자 수익률 개선, 부채비용 절감과 같은 영역을 검토하여 보유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한다. 이 검토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자원을 발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Review)은 재정상태표 관리가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개척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공공자산(과소 기록 및 활용되지 않은 지적자산 포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공공부채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방법, 재정상태표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는 감사원이 통합결산서 감사보고서와 기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상태표 관리단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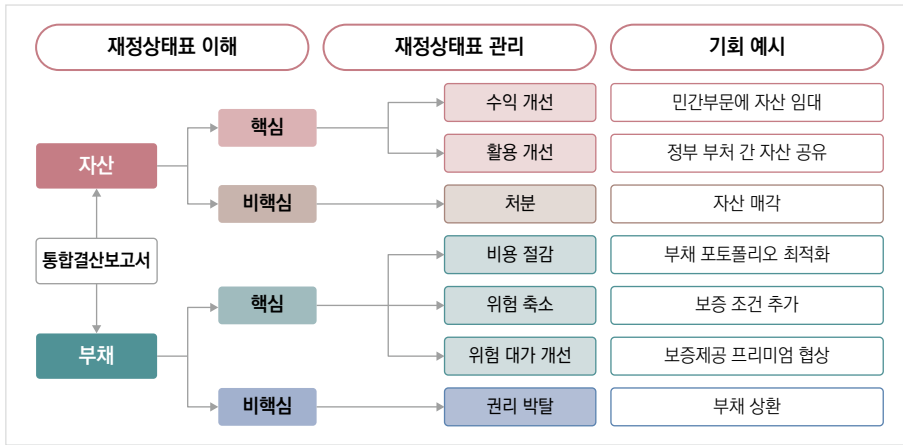
## 3) 「재정상태표 분석 보고서」(by. HMT 재정상태표 관리단)

2017년 재무부는 더 이상 정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처분과 보유 자산의 수익 개선, 부채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상태표 분석(BSR: Balance Sheet Review Report)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재정상태표 분석 프로젝트의 결과로 2020년 재정상태표 분석 보고서가 최초 발간되었으며, 본 보고서에는 재정상태표 분석 방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재정상태표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재정상태표 분석 접근법 및 재정상태표 프레임워크 개발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2** 재정상태표 분석 접근법



- 핵심과 비핵심 구분 ⇒ 비핵심 항목 처분 및 폐기
- 관리목표 설정(수익 개선, 활용 개선 등)
- 구체적 수행전략(임대, 공유, 보증조건 개선 등)

**표1** 재정상태표 프레임워크: 뉴질랜드, IMF 분류체계 유사

구분	정책 포트폴리오	재무 포트폴리오	상업 포트폴리오
<b>구성</b> (예:WGA)	유형자산, 특수자산 (예: 미수채권, 유형자산 등)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예: 채무증권, 외환보유, 연금, 정부차입)	공기업 (예: 정부투자 기업지분, 학자금대출)
<b>관리 목적</b>	정부 정책목적 지원 (예: 공공서비스 제공, value for money 달성)	미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 구축, 계약상의 의무로 부채 조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 납세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증대
<b>감독</b>	각 부처의 장이 정책 목적을 수립하고 자산의 매입과 매각 시기 결정	각 부처의 장이 부채 조달을 결정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	각 부처의 권한으로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자산 관리
<b>처분</b>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점에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의 가치(value for money) 달성	펀드매니저의 분석에 따라 다음의 경우 자산 매각 (유동성 제고 목적, 부채 현실화)	각 부처의 권한 내에서 펀드매니저에 의해 자산 매각

재정상태표 분석의 목표는 재무부의 재정 및 공공지출 관련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상태표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다. 세부 목적으로 국가 정책이 공공부문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투명성과 자산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고하고, 장기위험과 부채비용 관리 강화를 통한 위험 관리가 있다.

구분	목적	세부적인 목표 달성 및 수행 내용
재정상태표 분석보고서	투명성	자산 매각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규정 마련 「자산 매각 공시: 정부 지침 발간」- HMT, 2019년 3월
		보다 광범위한 재정상태표 고려, 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 공공부문순금융부채(PSNFL) 및 공공부문순가치(PSNW) 제시
	자산관리	장기적 관점의 자산관리 PFI 및 PF2 폐지: (현황) PFI 관련 계약으로 인해 연간 100억파운드(약 15조원)의 손실 발생, 과도한 부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지식자산 가치 극대화 「공공부문 지적재산권 및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스마트화」 발간(2018년 11월)
	위험관리	One Public Estate 프로젝트, 디지털 국가자산 등록부 개발 정부소유 토지 및 부동산의 활용 개선, 잉여 부동산 매각 검토
지방정부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 통제	지방정부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 통제	
		의료과실로 인한 재정위험 관리: (현황) 의료과실로 인한 국가보건서비스에 부과된 법적 소송 관련 총당부채의 급속한 증가, 산부인과 관련 청구가 전체 50% 차지, 산부인과의 안전 개선을 위한 표적 조치 시행(파일럿 프로그램)

출처: HMT, "The balance sheet review 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balance-sheet-review-report-improving-public-sector-balance-sheet-management>

## 라. 영국의 발생주의 활용사례의 시사점

센터는 본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영국의 발생주의 활용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 1) 재정위험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영국은 현재 독립적인 기관(OBR, 예산책임청<sup>8)</sup>)을 통해 공식발간 형태로 재정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객관성, 투명성 및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행 재정위험관리의 체계 수립의 배경으로 ① 재정위험관리 요구와 ② 독립성이 식별되었다. 영국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회와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재정위험보고서(FRR: Fiscal Risk Report)」를 정례적으로 발간한다.

8) 예산책임청은 의회에 경제예측 및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재무부의 자원 사용을 관리·감독함

- (재정위험관리 요구) 부실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지적사항과 국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음. 대표적으로 「영국-재정투명성평가(IMF, 2016)」에서는 영국 위험관리체계의 괴리를 지적(위험 통제가 국제모범사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특정 위험에 대한 요약보고서의 부재)한 것이 「재정위험보고서」 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 (독립성) 영국 내 정부주도 경제 예측이 독립적이지 않고, 각 부처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정보 산출기관인 정부가 아닌 독립기관(OBR)에서 재정위험을 평가하게 됨

이와 같은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정책화의 성공요인으로 ① 부처 간 협조 ② 법제화 ③ 고도화된 발생주의 시스템(발생주의 예산 및 공공부문통합결산서) ④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 및 개선노력이 식별되었다.

- (부처 간 협조) 예산책임청과 정부 부처 간 협조(데이터 제공), 부처-공기업 간 협업(CLCC)은 정책화의 성공요인으로 간주
- (법제화<sup>9)</sup>) 「재정위험보고서」 및 이에 대한 「정부대응보고서」는 법적 의무
- 고도화된 발생주의 시스템(발생주의 예산 및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예·결산 모두 발생주의로 산출되며, 공공부문 전체 통합재무정보 산출 및 재정상태표 검토보고서 등의 경험과 시스템이 바탕이 됨
-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 및 개선노력) 「재정위험보고서」에 대한 「정부대응보고서」 공식제출 및 개선노력 수행(예: 지적된 우발부채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발간, 공기업과 우발부채 관리단 출범)

## 2) 자산·부채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영국의 발생주의 기반 자산·부채 관리의 특징으로 객관적 평가와 외부지적이 있다. 감독기관인 감사원은 정부 재정상태표 평가보고서 시리즈를 발간(2016~2017년)하여 금융자산·금융부채, 정부차입, 연금, 충당부채·우발부채

9) 「2011 예산책임 및 감사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국가채무 관리정책에 관한 헌장이 제정되어 2년에 한번 「재정위험보고서」 발간(by. 예산책임청), 「재정위험보고서」 발간 1년 이내 「정부대응보고서」 발간(by. 재무부)

등을 주제로 정부의 잠재적 위험과 위험 관리방식을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 평가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재무부는 2017년부터 자체적 재정상태표 분석(REVIEW)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상태표 분석 활동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2017 예산서를 통해 재무장관은 부동산 최적화, 투자 수익률 개선, 부채비용 절감과 같은 영역을 검토하여 보유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자원 식별, 재정 지속가능성 향상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재정상태표 검토(Review)를 공표했다. 이에, 재정상태표 분석은 자산의 수익성 개선 및 부채비용 감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실행되었다.

영국의 자산·부채 관리 정책화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통합재무제표 제공: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보건, 공기업의 계정을 통합한 공공부문을 통합결산서(WGA) 발행(장기 PFI 약정 또는 정부 자산의 규모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데이터와 통찰력 제공)
- 부처 간 협업: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의미 있는 검토 가능
- 전담조직 신설: 재무부 내 10명의 경제, 정책,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상태표 관리단 신설
- 재무부의 의지: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실행 의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재정상태표 분석의 결과가 정책에 적용된 사례로 PFI 및 PF2 폐지,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충당부채를 줄이기 위해 산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NHS를 상대로 한 의료소송 관련 비용은 정부 전체 충당부채 중 두 번째 규모로, 이 중 산과 관련 소송이 50%로 산과 관리가 전체 충당부채 축소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02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소개

영국 재무부는 2020년 3월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Government Insurer of Last Resort)」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① 위험 부담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을 제공하는 영국 정부의 역할과, ② 이러한 위험 부담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우발부채, 그리고 ③ 우발부채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회계 재정통계』는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심층조사」를 주제로 진행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2021 해외공동연구의 참여국인 영국의 재정위험 식별 및 관리 방안 중 하나를 소개한다. 영국 정부는 재정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우발부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우발부채 관리 노력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다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71660/06022020\\_Government\\_as\\_Insurer\\_of\\_Last\\_Resort\\_report\\_Final\\_clean\\_.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71660/06022020_Government_as_Insurer_of_Last_Resort_report_Final_clean_.pdf)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친 민주주의의 확산과 복지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의 범위는 홍수위험, 테러보험, 여행자 보호에서 소기업 대출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을 포괄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은 당장은 확실하지 않으나 미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출로 이어지는 채무(우발부채)를 발생시킨다.

영국 재무부가 2017년에 도입한 재정상태표 관리 프로젝트<sup>10)</sup>를 통해 정부의 우발부채 규모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채무 관련 위험을 줄이고, 공공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정부 우발부채 관리 개선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한다.

10) 2조파운드 규모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4조 9천억파운드에 달하는 채무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위험관리는 공공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최후 보험자 역할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해당 위험의 현실화는 시장의 자금을 빌리거나, 타 분야의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부채는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위험을 부담할 때 해당 위험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정부 최후 보험자 역할은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시장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 ②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위험(예: 테러 보험과 같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규모가 막대하여 민간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③ 자국민 보호(예: 여행사의 부도로 인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여행자 본국 송환)

또한, 정부가 최후의 보험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직면하는 우발부채의 범주는 재정보증, 명시적 정부 보험, 소송, 구매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로 보장되는 우발부채는 재정보증과 명시적 정부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과 명시적 정부 보험 형태의 우발부채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시정하고자 개입한 결과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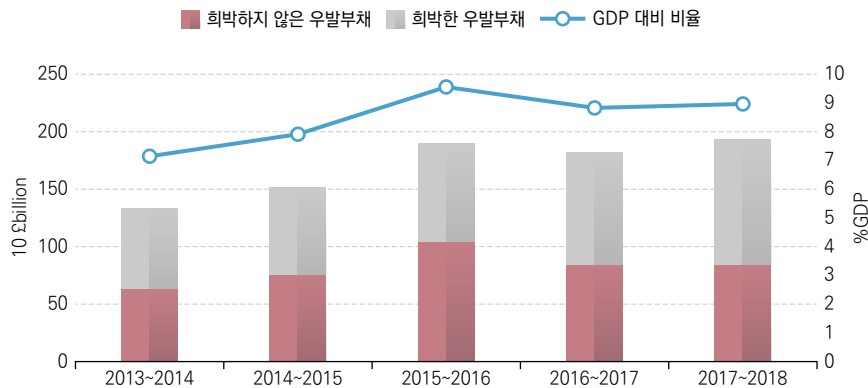
- 재정보증 - 채무를 불이행하는 제3자의 채무를 정부가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금융권 대출 또는 여타 유형의 금융 상품에 대한 보증 형태임
- 명시적 정부 보험 - 보상을 하거나 보험자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사건이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 소송 - 정부에 직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
- 구매자 보호 - 정부 자산 처분 시 발생하며, 자산 매각이 용이하도록 특정한 시장 표준 보증 제공(본 보증은 매각대상 자산이 정부 소유의 자산이며 자산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자산 관련 법적 채무를 정부가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 가. 현행 신규 우발부채 관리 방안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의해 작성되는 영국의 공공부문 통합결산서(WGA: Whole of Government Accounts)는 정량화된 우발부채 보유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sup>11)</sup>한다. 주목할 점으로 정부는 민간부문에 요구되는 회계기준 이상으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를 별도의 범주에 포함한다. 정부 부처별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의 특성을 설명하여 가능한 경우 그것의 추정된 재정적 영향 또한 제시한다. 현재 통합결산서의 수치에는 정부 부처가 정량화한 희박한 우발부채만 포함되며, 정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는 주석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은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시나리오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1** WGA에 명시된 우발부채



2013년 이후 우발부채는 증가추세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재무부는 2017년 ‘우발부채 승인체제’를 도입했다. 우발부채로 승인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신규 우발부채이며 ②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③ 다섯 가지 기준(논거, 노출액, 위험과 수익률, 위험관리와 완화, 재정 여력)에 부합하며, 평가규모가 300만파운드 이상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11) 우발부채는 각 우발부채가 납세자에게 비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한 다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후속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그림2 우발부채 승인체제

1. 논거	2. 노출액	3. 위험과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b 시장 실패 시 CL 발행이나 변경이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이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나은가?</li> <li>c 어떤 대안책이 검토되었는가? (예: 보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L의 최대 규모는(정해진 경우)?</li> <li>b 이 규모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c CL(정해진 경우)은 언제 만료되는가?</li> <li>d 이러한 만기가 왜 필요한가?</li> <li>e 탈출전략이 존재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무엇이 CL을 현실화 시키는가?</li> <li>b 완전히 현실화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현실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li> <li>c CL과 관련된 예상 손실은 얼마인가?</li> <li>d CL의 수명기간에 걸쳐 분배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li> <li>e CL의 수익대비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li> </ul>
4. 위험관리와 완화	5. 재정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L 관련 위험은 누가 관리하며 위험 관리에 어떤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이용하는가?</li> <li>b 어떤 위험 완화 도구를 고려하였는가?(예: 부분적 보증, 담보, 위험 감수행위에 대한 통제, 재보험 등)</li> <li>c 재무부는 CL 관련 위험부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는가?(예: 보증료, 조건부 청구, 이익분배 등)</li> <li>d 재무부는 어떻게 잔여위험을 예방해야 하는가?(예: 비상자금, 금융자산 확보 하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L이 현실화될 경우 부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련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가?</li> <li>b 부서의 가용 자원 대비 CL의 예상 손실 비율은 얼마인가?</li> <li>c CL이 현실화될 경우 이것이 PSNB와 PSND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li> </ul>	

출처: HMT, 우발부채 승인체제

해당 승인체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도입된 이래 약 1,500억파운드에 달하는 100개 이상의 신규 우발부채가 발행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본 우발부채 승인체제를 거쳐 신규 우발부채로 산입된바, 이러한 체제는 신규 우발부채 생성 절차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고,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 또는 개선된 정량화 정보가 제출됨
-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정책 변경이 이루어짐

더 나아가, 96억파운드 이상에 달하는 수많은 우발부채가 완전히 반려되어 위험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

우발부채 승인체제와 더불어 정부가 부담할 최대 추정액(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채무)을 제시하는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발부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암묵적 우발부채나 승인체제 도입 이전의 우발부채 관리의 미흡 등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암묵적 우발부채

암묵적 우발부채란 비용을 부담할 공식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대중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 정부가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안는다. 이러한 위험은 부처 회계나 WGA에 우발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므로 미래에 위험이 현실화될 때에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암묵적 채무를 제거할 수 있다.

정부가 암묵적 위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암묵적 우발부채의 범위를 정량화하기란 명시적 정부 보증을 정량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므로 암묵적 우발부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잠재적 채무가 되리라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경우 정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가 암묵적이라는 사실로, 이런 유형의 위험에 관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는 여타 우발부채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비해 극히 소량이다. OBR의 「재정위험 보고서」에는 암묵적 우발부채가 식별되어 있다.

## 나. 우발부채 관리 추가 개선

### 1) 국제 모범 사례

IMF와 OECD는 우발부채가 각 정부의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우발부채 관리에 관한 모범사례를 권장해 왔다.

- 예상 손실액을 충당할 수 있는 위험기반 수수료 청구 및 위험 완화를 위한 위험분담 약정 활용
- 보증, 대출 및 보조금 간의 중립성 제고.<sup>12)</sup> 정부에 의해 우발부채는 적절한 조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무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OECD와 IMF는 중립성 제고를 위해 우발부채 발행 시 잠재 비용 및 예산 책정을 권고
- 명목자금을 통해 미래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 제고. 우발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부채 발행 시 자원을 따로 비축하고 수수료를 축적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재무부에 반환되는 명목 자금은 관리 용이성으로 인해 선호됨

12) IMF는 우발부채에 대해 “처음부터 현금흐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산 제약을 회피하고자 우발부채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직접 지출보다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경고함

- 노출 한도 설정. 신규보증은 노출 한도를 규정하는 위험 체제를 통해 규제되어야 하며, 보증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 수수료 금액 및 위험 완화조치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우발부채를 발행하기 전, 비용/위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지속적인 우발부채 보유액 모니터링. IMF는 정부가 우발부채 보유액을 평가하고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을 인식하는 예산 관행 채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우발부채 관리 모범사례 1: 스웨덴

스웨덴 국채관리소(SNDO)는 1960년부터 정부보증을 담당해 왔으며, 스웨덴 의회는 1990년 중반에 공식적인 체제를 채택했다. 국채관리소는 스웨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과 보증을 검토하는데, 이 둘 모두 유사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체제는 예산 관점에서 정부가 보조금, 대출 및 보증 간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재무제표 위험에 대한 책임감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도록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 원가 회수: 정부는 보증/대출 관리비와 예상 손실(예상 원가)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 수령자에게 예상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보조금은 당해 지출에서 충당되고 여타 지출과 동일하게 처리됨
- 장기적 측면으로 본 위험중립: 정부의 재정상태표 규모에 비해 대출/보증 규모가 큰 경우 정부는 원가 회수를 초과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명목계정: 수수료가 중앙 정부의 현금 흐름에 포함되며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해당 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자금에 누적되지는 않지만 각 보증에 대한 수입과 지불금은 명목계정에 인식

국채관리소는 대출/보증을 발행, 모니터링 및 보고에 있어서 중앙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국제개발 및 주택공급을 포함한 특정 분야에서 대출과 보증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4개의 상이한 기관이 존재한다. 이 4개 부문 이외의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국채관리소가 위험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책정한다. 관련 부처는 이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나 동 보조금은 부처 예산에서 조달해야 한다. 해당 모델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부처만이 위험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국채관리소는 대출/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간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동 대출/보증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험 관점에서 신규 보증의 발행과 기존 보증의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 스웨덴 정부가 비록 몇몇 개별 보증에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으나 연평균 20억SEK(약 2,704억원)의 보증 수수료를 벌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손실과 미래 손실을 충당함에 있어서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 우발부채 관리 모범사례 2: 네덜란드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발행한 우발부채와 대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다음을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했다.

-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가” 정책을 도입, 즉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우발부채를 승인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보증제도와 변경된 기존 보증제도는 5년마다 표준화된 재평가를 거쳐야 함
- 정부의 우발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부처는 매년 제한된 승인 기간 내에 점검표를 통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점검표는 대체안, 위험 수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및 관련 한도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함. 대부분의 경우 각 부처는 점검표를 제출하기 전 우발부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점검표가 한계값 역할을 함
- 각 부처에 대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재무부에 직접 지급되고, 경상수지에 기록되며, 해당 우발부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총당에만 활용됨. 손실이 프리미엄보다 높으면 그 손실분 아니라 모든 미래 손실까지 해당 부처가 책임져야 함
- 심각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전문가의 2차 의견을 통해 프리미엄 수준 결정
- 부처는 수혜자가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감액하여 우발부채를 보조할 수 있음. 보조금은 부처 예산으로 총당되어야 하며, 재무부와 장관협의회는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요구
- 신규 우발부채를 발행하려는 부처는 필요 시 여타 우발부채 노출액을 줄이면서 자신의 여유자금을 이용해야 함
- 우발부채는 내각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음. 재무부를 거쳐 내각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와 공유된 후에야 온라인으로 고시되며, 이러한 절차는 투명성을 제고시킴

새로운 체제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우발부채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발부채의 규모가 감소했다. 2008년 640억유로에서 2012년 말에 2,580억유로로 정점을 찍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해에 하향세를 보였고 2018년 말에는 1,770억유로를 기록했다. 해당 체제로 인해 위기와 관련 없는 국내 우발부채는 안정세를 이어갔고 2019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70억유로로 감소했다.

## 2) 영국 정부의 4대 목표와 10가지 제안사항

목표 달성을 위한 10가지 제안	
<b>전문성 향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1) 보증과 보험에 대한 가격 책정, 발급,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li> <li>▪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중앙기관 수행</li> <li>▪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 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포트폴리오 구성 등)</li> <li>▪ (제안 4) 우발부채 보유액 감독 개선</li> <li>▪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정기보고 등)</li> </ul>
<b>보상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6) 정부가 보험 보증을 제공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받음(손실충당 수수료)</li> </ul>
<b>위험감소 인센티브 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7) 정부 부처가 유사한 위험 유형과 수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 개선 (예산체제에 우발부채 예산원가를 반영)</li> </ul>
<b>손실부담 명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8) 재무부, 부처, 민간 부문 간 손실 분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분담 개선</li> <li>▪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 체계 구축</li> <li>▪ (제안 10) 현 우발부채 보유액 고려, 기존 위험관리 범위 확장</li> </ul>

우발부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 ② 위험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③ 위험을 잘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④ 손실부담 명확화가 요구된다. 영국 재무부의 재정상태표 관리단(Balance Sheet Management Team)은 각 분야에서의 추가적 개선 기회를 식별하였고, 식별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우발부채 관리 개선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우발부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을 반영하도록 건별로 맞춤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1) 전문성 향상

보증이나 보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이해, 관리 및 평가하고 보증료나 보험료를 적절히 책정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당 전문성에는 신용위험 분석(재정보증 관련), 보험통계분석(보험 위험 관련), 상업 및 법률 지식이 포함되며 영국에는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부문 조직<sup>13)</sup>이 존재한다.

13) 영국수출금융(UK Export Finance),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인프라 프로젝트 기구(IPA: Infrastructure Project Authority), 영국 보증제도(UK Guarantees Scheme), 기업금융보증(EFG: Enterprise Finance Guarantee), 국민건강보험 레졸루션(NHS Resolution),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Pool Re(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의 대응으로 보험계와 재무부의 협력으로 1993년에 설립한 조직)

• 현황 및 문제점

(위험의 규모와 분포에 대한 정보 개선) 특정 우발부채에 대한 위험 규모와 분포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종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사건이 부족하거나 반 사실적 사건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7년 이전에 발행한 우발부채는 관련 지급액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필요한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위험을 평가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모든 부처가 이러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모델링, 모니터링, 관리 전문성 개선) 우발부채 정량화나 관리 또는 보증료와 보험료 책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부처 내에 두루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관리할 우발부채가 많지 않거나, 관리 방법에 관한 요건이 거의 없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요인일 수도 있으며, 보증과 보험을 발행하는 특정 부처 내에 신용분석, 상업 및 법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를 타 부처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정부 우발부채 관리) 정부는 개별적으로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해 보이는 여러 개의 보증을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 내 경기 침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보증이 일시에 촉발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유발 요인들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공통 촉발점과 체계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우발부채를 동시에 현실화시키는 외부 사건의 영향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량 제고)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 제안사항

### (제안 1) 보증과 보험에 대한 가격 책정, 발급,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

상기 식별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우발부채를 관리할 중앙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 기관은 위험의 평가, 정량화, 가격 책정에 있어서 타 부처를 지원할 수 있다. 각 부처마다 자체적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 전반에 걸쳐 보증이나 보험을 발행할 때 일관적 접근 방식과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출은 재정보증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중앙 기관의 전문성은 대출이나 여타 금융 거래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중앙기관 수행

보증과 보험의 가액은 중앙 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위험 부담의 대가가 적절히 책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독립적으로 정량화할 때 각 부처는 상이한 모델이나 가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정의 복잡성과 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방법론이나 가정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예상 손실이나 수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를 더 광범위한 재정위험 모델링과 통합함에 (제안 3 참조) 있어서 모델링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독립적 검증은 정부 전체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증이나 보험으로 인한 위험이 둘 이상의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 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포트폴리오 구성 등)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초기 발행 및 채무 기간에 걸쳐 우발부채를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 위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우발부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 기관은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포트폴리오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우발부채, 편중 위험, 체계적 위험 간의 연관성을 식별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경제충격의 영향력에 대한 정

부의 이해와 완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우발부채 위험과 노출 분석은 기존의 재정위험 관리 프로세스와도 통합되어야 한다.

#### (제안 4) 우발부채 보유액 감독 개선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면 정부는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발부채를 이해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 생성된 우발부채는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중앙 기관은 기존의 우발부채 보유액을 평하고, 정량화하고,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 오래된 우발부채의 경우 관련성이 유지되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정기보고 등)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는 정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 추정치 대비 포트폴리오의 실적(손실액, 수익, 회수액 포함)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재무보고를 보완하게 된다. 우발부채의 투명성과 가용 데이터가 개선되어 더 나은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 보상개선

일부 공공부문 기관이 보증이나 보험에 대해 상업적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이 정부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재정상태표 검토를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과소 보상을 받은 몇 가지 영역이 식별되었다.

### • 현황 및 문제점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의 비용 충당 및 위험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설정용 위험기반 수수료 청구 및 담보 설정) 예상 위험을 반영한 수수료를 수혜자에게 부과하면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면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어 수혜자는 부과된 수수료를 줄이려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 기반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

으며, 정부 보증/보험 수혜자가 위험 감소 행동을 하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를 절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위험을 줄여주게 된다. 효과적으로 가격 책정된 위험은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 제안사항

**(제안 6) 정부가 보험 보증을 제공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받음(손실충당 수수료)**  
적절한 경우 정부는 적어도 보증/보험을 요하는 민간 부문에 예상되는 손실과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장하는 OECD와 IMF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수혜자에게 전액을 전가하지 않은 채 정부가 보증/보험을 보조하기로 정한 정책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예: 시가보다 낮게 판매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고자 정부는 주택 보증 수수료를 보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처는 보증/보험 보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그 보조금(즉 수수료 수입과 예상 원가의 차액)은 인식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실제적 위험 감수 비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위험이 현실이 된 경우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부처는 더 나은 재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3) 위험감소 인센티브 설정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처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산에 우발부채 관련 예상 손실을 인식하면 관련 부처가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 (4) 손실부담 명확화

재무부, 부처 및 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위험분담은 ① 명확성을 제공하며 ②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③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인센티브를 개선할 수 있다. 몇몇 영역에는 이러한 명확성이 존재(예: 영국기업은행의 ENABLE 보증<sup>14)</sup>)하지만 정부 전체에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노출범위나 한계에 대한 명확성 제고) 명확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우발부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재정보증 - 재정보증에 관련된 정부의 노출은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즉 정부가 보증하기로 약정한 채무액으로 노출이 제한된다. 명시적 정부 보험 - 이러한 유형의 채무에 대해 정부는 미래의 비용 발생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 분야에 걸친 최대한의 위험분산) 최후 보험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상이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에 적용된다. 한 분야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분산할 경우 개별적 우발부채에 미치는 손실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충격에 대비한 완충재 구축 능력 제고) 보증/보험 제공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수수료/보험료를 부과하면 정부는 위험이 현실화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함에 있어서 더 나은 재정적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부처가 보증/보험 수수료를 청구하여도 그 수수료가 재무부에 반환되는 시점까지 수수료 수입을 보유할 수 없다. 이는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완충장치가 없어 해당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해도 장점이 거의 없어 보증/보험 수수료를 청구할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14) ENABLE 보증제도의 위험분담 약정: 대출을 제공한 금융사 역시 보증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첫 5%를 흡수하며 보증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위험에 기반한 수수료 지불. 보증 수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되며 재무부로 반환. 영국기업은행은 그의 후원부처인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 그리고 재무부와 위험분담 약정을 체결함. 이에, 보증 손실이 발생하면 그 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서 영국기업은행이 먼저 충당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실은 BEIS가 당해 예산에서 2천만파운드까지 충당. 2천만파운드 이상의 손실은 종신 누적보증수수료 한도 내에서 재무부가 충당하며, 그 이상의 손실은 BEIS가 흡수

## • 제안사항

### (제안 8) 재무부, 부처, 민간부문 간 손실 분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분담 개선

수혜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보증과 보험의 구조를 정부 전체에 걸쳐 표준화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 보증과 보험을 제공할 때 납세자와 민간부문 간에 2차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부분적 보증이나 공동 지급조치도 좀 더 일관성 있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납세자가 손실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정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영국 재무부의 우발부채 승인체제,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그리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여타 제안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우발부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도 해소되지 않고 정부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암묵적 우발부채가 존재한다. 몇몇 암묵적 우발부채는 명시적 채무로 전환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 잘 관리될 수 있다.

정부는 OECD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미 수행된 예산책임청 보고를 토대로 명시화를 통해 또는 납세자에게 아무런 잔여 위험도 전가하지 않을 조치를 통해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암묵적 채무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 (제안 10) 현 우발부채 보유액 고려, 기존 위험관리 범위 확장

위험분산 체제는 최종 보험자 역할을 하는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유사한 보증/보험에 대한 위험을 집결시키면 대규모 풀(pool)의 잠재적 노출을 공유하게 되므로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진 개별 건의 손실이 주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어 더 나은 보호층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보험 비용이 절감되고 손실 예측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수혜자에게도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우발부채 보유액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분산체제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신규 우발부채 발행 시 위험분산 방식이 적절한지와 정부 전체에 우발부채 노출액 한도를 설정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발부채는 재정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부 전체를 위한 위험체제를 설정하고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중앙기관이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에는 이를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재무부의 우발부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에 대한 제안사항은 국제모범사례에 대한 OECD와 IMF의 권고와도 부합한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추진할 10가지 제안사항은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줄여주며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제2~10차)
-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 01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개 항목(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내부거래 제거,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계정과목 선택 오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10월 5일(화)과 10월 6일(수) 양일 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만을 개최하며, 설명회 영상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교육포털 학습자료실에 게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 동향 및 중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중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 후

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  
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  
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02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2020년에 발간했던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인쇄한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10년간(2011~2020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술하였다.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89%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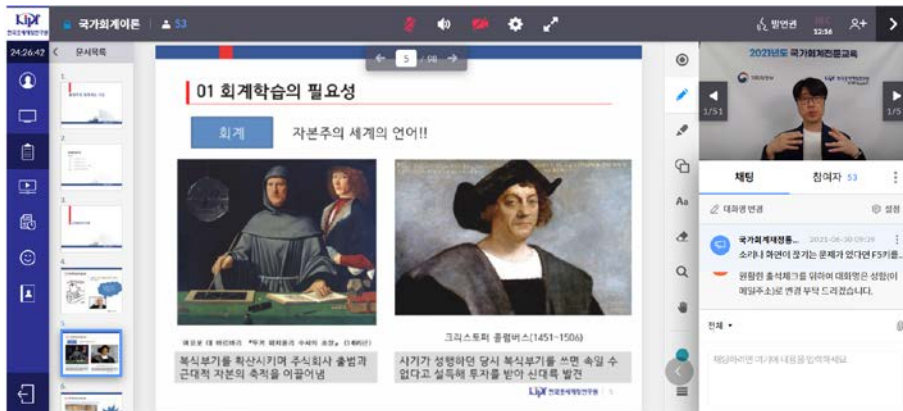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 03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제2~10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 제2~10차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교육 일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심재영 명예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중열 명예교수, 강원대학교의 정광화 교수, 도원회계법인의 안섭 회계사가 차수별로 돌아가며,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와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회계법인의 허웅 회계사가 세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국가회계이론 교육생 수강 화면(2차시, 2021. 6. 30(수))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오전 시간은 수입·지출(제1, 2, 4, 5, 6, 7, 9, 10차)과 국유·물품(제3, 8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센터의 회계사들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뒤이어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이 마무리 되었다.



## 04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제거 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이론 과정의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체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교육 방식을 변경하여 실시하며, 재무결산실무는 2개 차수가 각 2일간,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1개 차수가 1일간 진행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들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www.kipf.re.kr/edu/](http://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1 재무결산실무 일정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	정원
무관	10. 21.(목) ~ 10. 22.(금)	10:00 ~ 17:30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100명
	10. 28.(목) ~ 10. 29.(금)	10:00 ~ 17:30		100명

표2 재무결산실무 교육과정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 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1일차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 사례	2.5	1. 감사원 지적 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표3** 국가회계의 활용 일정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	정원
무관	10. 6.(수)	10:00 ~ 17:00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100명

**표4** 국가회계의 활용 교육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국가회계  
재지통계



# 재정통계 동향



-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재정분석
-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01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가. 「2022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31일(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재정 총량

2022년 예산안 중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의 세수증가로 전년 대비 55.9조원(19.8%) 증가하고, 국세외수입은 기금수입 확대 등으로 10.3조원(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GDP 대비 1.2%p) 적자폭은 축소되고 국가채무(GDP 대비 2.9%p)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1 재정 총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sup>1)</sup> (A)	2022년 <sup>1)</sup> (B)	증감(B-A)	
			조원	%
• 총수입	482.6	548.8	66.2	13.7
- 예산	311.6	365.3	53.7	17.2
(국세수입)	(282.7)	(338.6)	55.9	19.8
- 기금	171.0	183.5	12.5	7.3
• 총지출	558.0	604.4	46.4	8.3
- 의무지출	266.1	301.1	35.0	13.2
- 재량지출	291.9	303.3	11.4	3.9
•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112.5	△94.7	17.8	
(GDP 대비 %)	(△5.6)	(△4.4)	(1.2%p)	
• 국가채무	956.0	1,068.3	112.3	
(GDP 대비 %)	(47.3)	(50.2)	(2.9%p)	

주: 1) 2021년은 본예산, 2022년은 예산안 기준

## 2) 분야별 자원배분

분야별 자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① 환경·R&D 분야에서는 탄소중립·뉴딜 2.0 등 핵심 분야의 투자를 위해 8.8~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②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5%의 증가세를 보였고 ③ 산업·중기 분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 확충에 중점을 두어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2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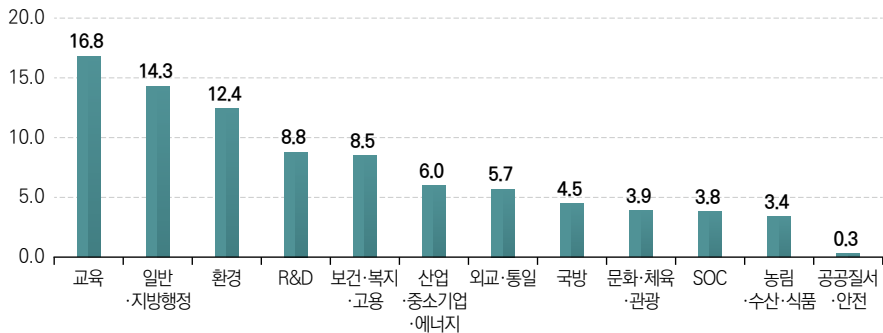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A)		2022년 정부안(B)		증감(B-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 총지출	558.0	100.0	604.4	100.0	46.4	8.3
1. 보건·복지·고용	199.7	35.8	216.7	35.9	17.0	8.5
2. 교육	71.2	12.8	83.2	13.8	12.0	16.8
3. 문화·체육·관광	8.5	1.5	8.8	1.5	0.3	3.9
4. 환경	10.6	1.9	11.9	2.0	1.3	12.4
5. R&D	27.4	4.9	29.8	4.9	2.4	8.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5.1	30.4	5.0	1.8	6.0
7. SOC	26.5	4.7	27.5	4.5	1.0	3.8
8. 농림·수산·식품	22.7	4.1	23.4	3.9	0.7	3.4
9. 국방	52.8	9.5	55.2	9.1	2.4	4.5
10. 외교·통일	5.7	1.0	6.0	1.0	0.3	5.7
11. 공공질서·안전	22.3	4.0	22.4	3.7	0.1	0.3
12. 일반·지방행정	84.7	15.2	96.8	16.0	12.1	14.3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2021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1 분야별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2021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31일(화)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 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2021년 482.6조원(본예산)에서 2025년 618.5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경제회복 공고화, 위기과정에서 확대된 격차(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기반 강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2021년 558.0조원(본예산)에서 2025년 691.1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될 전망이다.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Delta 3.7\%$ (본예산)에서 2025년  $\Delta 3.0\%$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Delta 5.6\%$ (본예산)에서 2025년  $\Delta 4.6\%$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5년까지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표3 2021~2025년 중기 재정총량**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75.4$ ( $\Delta 3.7$ )	$\Delta 90.3$ ( $\Delta 4.4$ )	$\Delta 55.6$ ( $\Delta 2.6$ )	$\Delta 64.5$ ( $\Delta 2.9$ )	$\Delta 69.4$ ( $\Delta 3.0$ )	$\Delta 72.6$ ( $\Delta 3.0$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112.5$ ( $\Delta 5.6$ )	$\Delta 126.6$ ( $\Delta 6.2$ )	$\Delta 94.7$ ( $\Delta 4.4$ )	$\Delta 104.7$ ( $\Delta 4.7$ )	$\Delta 108.4$ ( $\Delta 4.7$ )	$\Delta 109.2$ ( $\Delta 4.6$ )
국가채무 (GDP 대비)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 2)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재정수입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당시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등으로 2021년~2025년 기간 중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지출은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3.4%(‘21년 추경예산 기준, 본예산 기준으로는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계획에서 제시한 5.7%(‘20년 본예산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증가속도 조절에 따라 전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계획상 재정지표가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으며, 2021~2025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전년 계획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및 국가채무 증가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중기 재정총량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20~'24년 계획 <sup>1)</sup> (증가율)	481.8 (1.2)	483.0 (0.2)	505.4 (4.6)	527.8 (4.4)	552.2 (4.6)	- -	3.5 -
	'21~'25년 계획 <sup>2)</sup> (증가율)	- -	514.6 (6.8)	548.8 (6.7)	570.2 (3.9)	593.9 (4.2)	618.5 (4.1)	4.7 -
재정지출	'20~'24년 계획 <sup>1)</sup> (증가율)	512.3 (9.1)	555.8 (8.5)	589.1 (6.0)	615.7 (4.5)	640.3 (4.0)	- -	5.7 -
	'21~'25년 계획 <sup>2)</sup> (증가율)	- -	604.9 (18.1)	604.4 (△0.1) <sup>3)</sup>	634.7 (5.0)	663.2 (4.5)	691.1 (4.2)	3.4 -
통합재정수지	'20~'24년 계획 <sup>1)</sup> (GDP 대비)	△30.5 (△1.5)	△72.8 (△3.6)	△83.7 (△4.0)	△87.9 (△4.0)	△88.1 (△3.9)	- -	△30.4 -
	'21~'25년 계획 <sup>2)</sup> (GDP 대비)	- -	△90.3 (△4.4)	△55.6 (△2.6)	△64.5 (△2.9)	△69.4 (△3.0)	△72.6 (△3.0)	5.3 -
관리재정수지	'20~'24년 계획 <sup>1)</sup> (GDP 대비)	△71.5 (△3.5)	△109.7 (△5.4)	△123.2 (△5.9)	△128.2 (△5.9)	△127.5 (△5.6)	- -	△15.6 -
	'21~'25년 계획 <sup>2)</sup> (GDP 대비)	- -	△126.6 (△6.2)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3.6 -

표4 의 계속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국가 채무	'20~'24년 계획 <sup>1)</sup> (GDP 대비)	805.2 (39.8)	945.0 (46.7)	1,070.3 (50.9)	1,196.3 (54.6)	1,327.0 (58.3)	- -	13.3 -
	'21~'25년 계획 <sup>2)</sup> (GDP 대비)	- -	965.3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9.9 -

주: 1) '20~'24계획 : (2020년) 본예산 (2021년) 정부안

2) '21~'25계획 : (2021년) 추경예산 (연평균증가율) '21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재정수입이 6.4%, 재정지출이 5.5%

3) '21년 본예산 대비 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8.3%

### 3)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혁신 방향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재정혁신 방향의 중장기 재정위험관리 강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장기 재정위험관리 강화의 방법 중 하나로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기준(이하 재정준칙)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한도가 △3%보다 축소되도록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였고, 재정준칙이 위기 대응 등 재정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예외상황에는 준칙적용 면제, 경기 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한도를 △4%로 완화)도 마련하였다.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재정준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총량관리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국가채무 통계를 보완하고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채무 통계는 채무 총액규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자산과 국가채무로 구성된 국가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므로 국가채무의 보완지표로 순채무(총채무-총금융자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재정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디브리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방법 중 하나로 국가결산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의 복잡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다 간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핵심적인 재정정보를 요약하여 국민이 재정지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설명용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자산, 부채 등 국가 재정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 사회기반시설 등 주요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자산 평가방식 개선을 검토하며, 우발부채(지급보증, 파생상품 등)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의 공시방안에 대한 개선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 02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 3일(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LH·한전·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국가 인프라가 확충되어 2021~2025년간 자산은 154.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25년 162.6%로 전망하였다.

표1 연도별 자산,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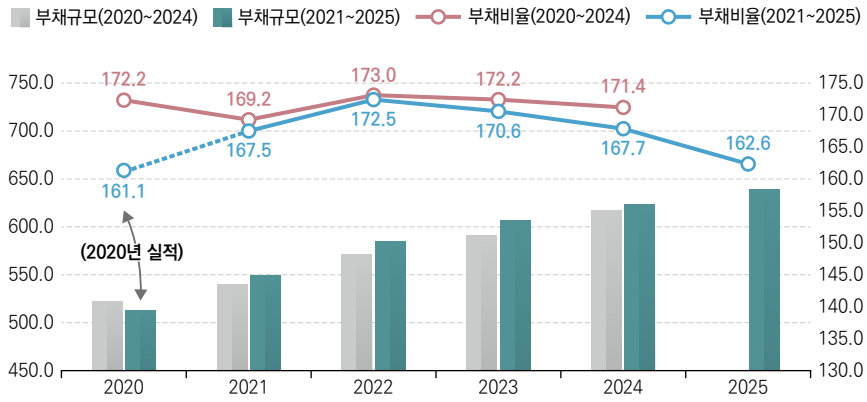
구분		2020 (실적)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5년 중장기	자산	830.0	877.8	924.7	962.7	995.1	1,031.8
	부채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부채비율	161.1	167.5	172.5	170.6	167.7	162.6

### 나. 전년 계획과 비교

전년(2020~2024년) 계획 대비 올해(2021~2025년) 계획상 부채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비율은 감소하였다. 부채규모의 경우 부동산 대책 등 신규정책을 소요 반영한 사항과 대상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신규로 포함되어 증가하였다. 반면 부채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2020년 부채비율 개선(161.1%, 계획 대비 △11.1%p 감소)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그림1 부채 규모·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



출처: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1. 8. 31.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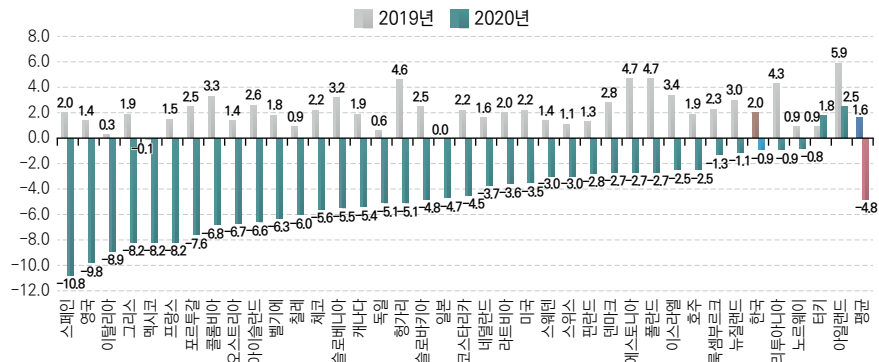
## 03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재정분석

### 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10.8%), 영국(-9.8%), 이탈리아(-8.9%), 그리스(-8.2%) 등 OECD 주요국의 202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대부분 크게 감소하였고,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2020년 -4.8%로 하락폭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경우 2020년 -0.9%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OECD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 OECD 국가별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9 – May 2021, 2021. 6. 15. 조회 기준

### 나. 코로나19에 따른 각 국가의 재정정책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IMF에서는 Fiscal Monitor를 통해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재정정책 대응에 대한 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본고는 2021년 6월에 발간된 IMF Fiscal Monitor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재정정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IMF Fiscal Monitor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재정정책을 집계하고 있다. IMF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국가별 재정정책 규모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1** 국가별 재정정책 유형

구분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감면	재정지출 확대	보건의료	방역, 치료 및 백신 등
		보건의료 외	코로나19 피해 개인 및 기업 지원 - 현금지급 - 실업급여 확대 - 보조금 지급 등
	세입감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동성 지원	용자, 정부보증, 자본 투입 등		

출처: IMF Fiscal Monitor, July 2021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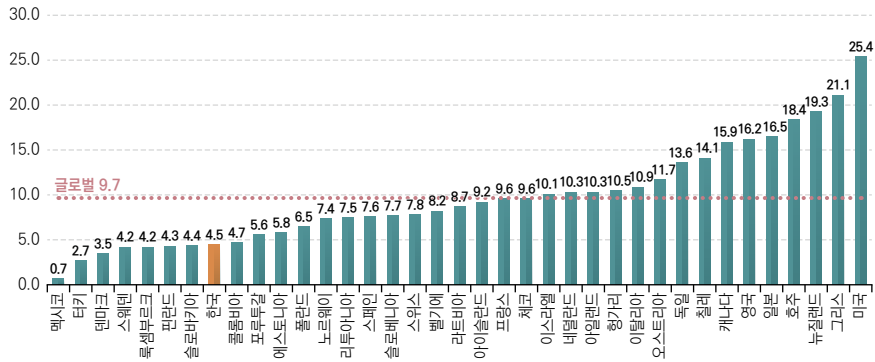
## 1)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감면 규모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감면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재정지출은 총 10.4조달러<sup>15)</sup>로 GDP 대비 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GDP 대비 25.4% 수준이며, 그리스(21.1%), 뉴질랜드(19.3%), 호주(18.4%), 일본(16.5%)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4.5%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전 세계 평균 9.7% 대비 낮은 편에 속한다.

15) IMF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료를 제출한 국가(190개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을 합산한 결과

**그림2**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등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Fiscal Monitor, July 2021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코로나19에 따른 각 국가의 대응정책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코로나 19 치료 및 백신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지출과 경제적 피해가 심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었다.

**표2** 나라별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감면 정책 주요 내용

(단위: 십억달러)

국가	주요 내용	규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지원</li> <li>일자리 창출, 재해수당 마련, 항공 산업 등을 위한 복구기금</li> </ul>	250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지원, 백신 개발</li> <li>임금보조, 취약계층 지원, 임대료 지원</li> </ul>	261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급 병가지원, 의료용품 지원</li> <li>근로자 임금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금, 자영업자 지원</li> </ul>	25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크, 백신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생산 및 유통</li> <li>대출 지원, 피해기업지원금, 근로장려금 확대</li> </ul>	831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원수용력, 의료 장비 및 연구 관련 지원</li> <li>자영업자 지원, 세입자 구제, 기초사회보장 혜택 증대</li> </ul>	519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상, 의료진, 장비 수 확장, 주요 의료품 부가세 및 관세 면제</li> <li>자영업자 소득 지원, 유급병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li> </ul>	440

출처: IMF Fiscal Monitor, July 2021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 6차례(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현재까지 총규모는 116.6조원(2020년 66.8조원, 2021년 49.8조원)<sup>16)</sup>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2020~2021년 추경예산 편성

(단위: 조원)

연도	회차	총규모	주요 내용
2020	1차	11.7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민생·고용안정 지원 등
	2차	12.2	긴급재난지원금
	3차	35.1	세입경정, 위기 기업 금융지원, 고용지원
	4차	7.8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지원, 아동 돌봄지원
2021	1차	14.9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지원, 백신 구매 등 방역 대책 지원
	2차	34.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역지원, 고용지원, 지방재정
<b>총계</b>		116.6	

출처: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보도자료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2)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감면 규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6.1조달러로, GDP 대비 6.2%에 이르고 있다. 유동성지원은 정부용자, 지급보증, 자본투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재정지출 등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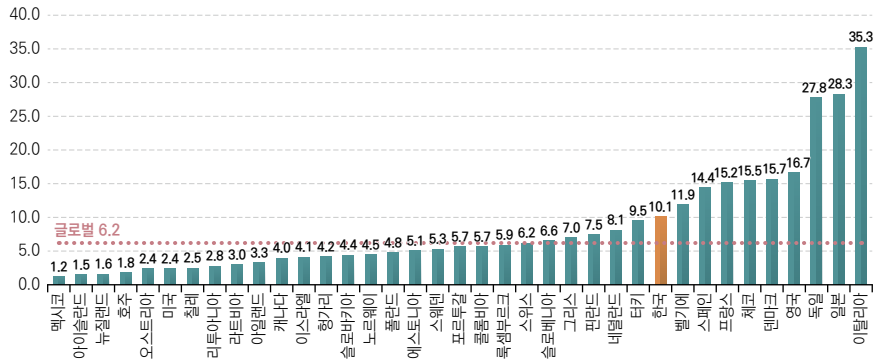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이탈리아로 GDP 대비 35.3%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1% 수준으로 유동성 지원 규모가 전 세계 평균 6.2% 대비 다소 높은 편에 해당한다.

16) IMF Fiscal monitor는 2021년 6월 이전까지 집계된 자료이며, 추경예산에는 2021년 7월 확정된 2차 추경예산까지 포함함에 따라 차이 발생

17) 정부용자, 지급보증, 자본투입 등의 재정운용은 추후 지원받은 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 가능한 정부용자가 감소(대손발생)하거나 지급보증에 따른 정부의 대지급 등이 늘어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림3**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등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Fiscal Monitor, July 2021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04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20회계연도 결산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1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73.0조원(전년 대비 26.5조원, 10.8%↑), 부채는 231.3조원(전년 대비 23.0조원, 11.0%↑)이고, 영업수익은 181.0조원(전년 대비 18.0조원, 11.1%↑), 당기순이익은 3.4조원(전년 대비 4.3조원, 454.1%↑)을 기록하였다.

###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준정부기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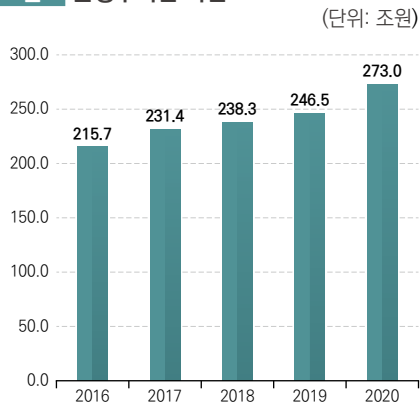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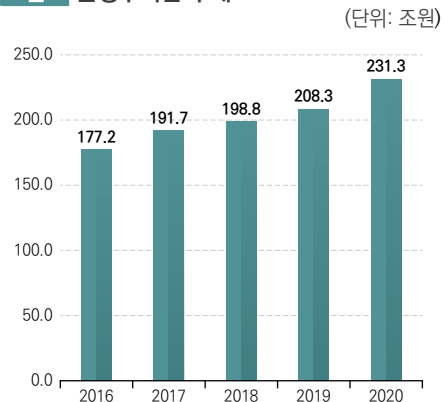


그림2 준정부기관 부채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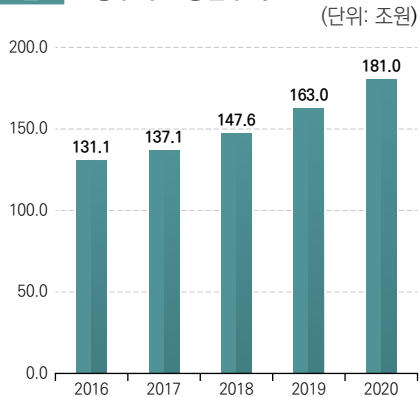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0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6.3%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 변동액(26.5조원) 중 83%(21.9조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변동에 따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확대에 따른 사채증가 등으로 상승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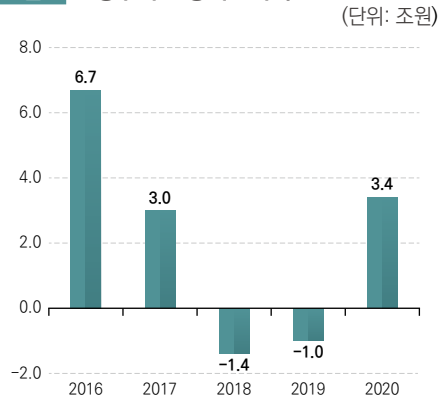
##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3** 준정부기관 영업수익



**그림4** 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6년 50.7조원, 2020년 69.5조원으로 4년 동안 18.8조원 증가), 국민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출연금수익도 증가하였다(2016년 17.6조원, 2020년 26.3조원으로 4년 동안 8.7조원 증가).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감소하다 2019년 당기순손실 폭이 축소된 데 이어, 2020년 3.4조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다. 당기순이익 변동의 주된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개인위생이 강화되면서 병원방문 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1.6조원을 기록하였다(2019년 △3.6조원, 2020년 +1.6조원으로 +4.3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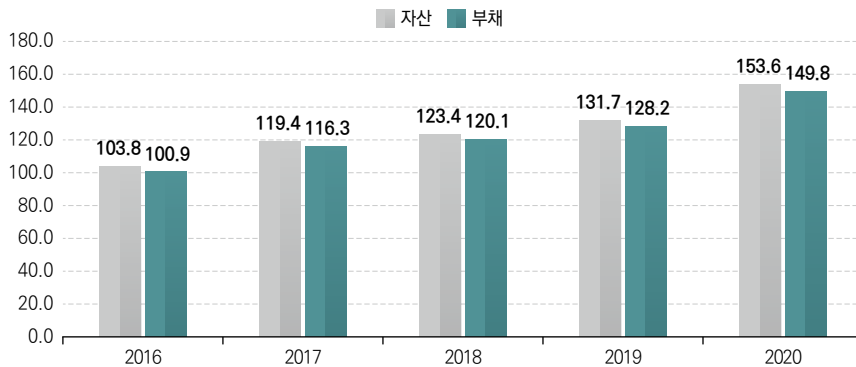
##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은 153.6조원, 부채는 149.8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6.3%, 총부채 중 64.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5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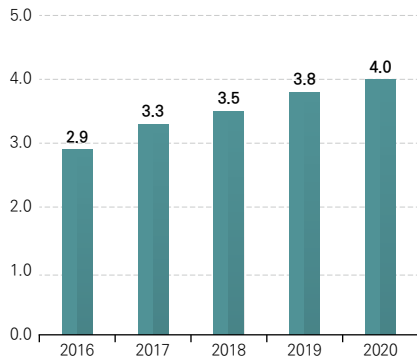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공급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의해 대출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발행으로 유동화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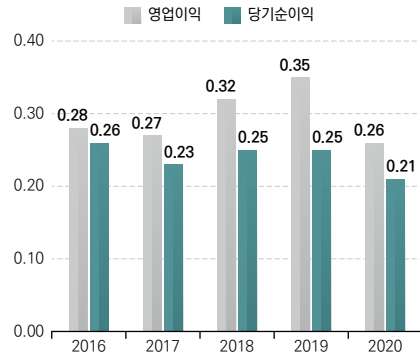
**그림6** 영업수익

(단위: 조원)



**그림7**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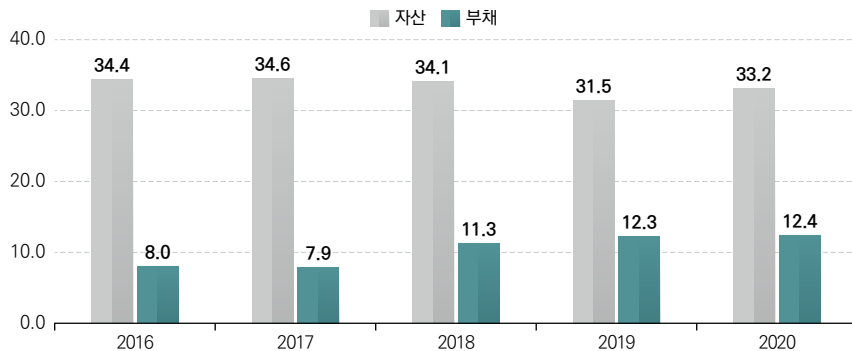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대출채권 이자 및 수수료수익이 늘어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비용 또한 동시에 늘어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대출채권 증가로 순이자와 수수료수익이 증가하였지만 파생상품 관련 순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33.2조원, 부채는 12.4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2.2%, 총부채 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8**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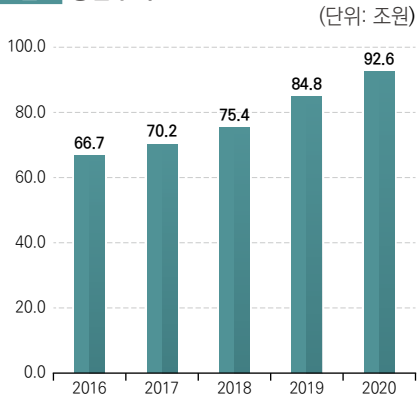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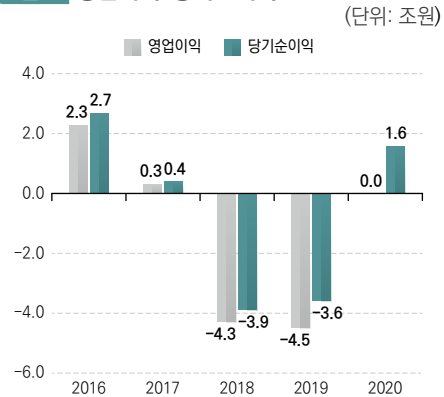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금수지 흑자로 인한 투자자산 증가, 보유사육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로 자산은 감소하고,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2020년의 경우 자산은 보험료 수입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선지급으로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부채는 보험급여충당부채는 감소하였으나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금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9** 영업수익



**그림10**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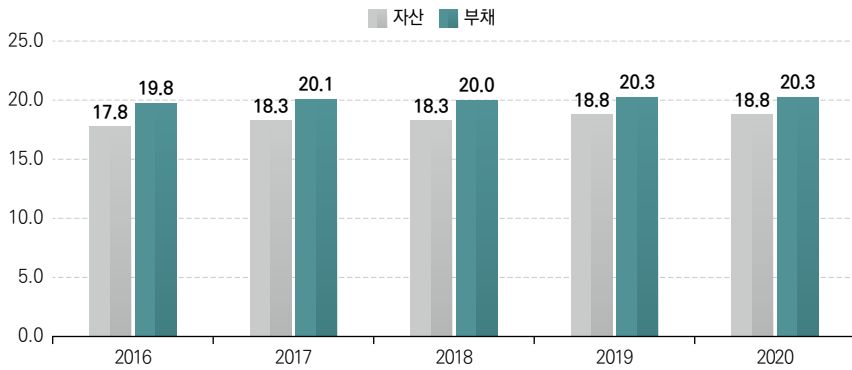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보험료율 증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정부지원금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건강보험급여충당부채 환입, 대손상각비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3) 국가철도공단

2020회계연도 국가철도공단의 자산은 18.8조원, 부채는 20.3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9%, 총부채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11**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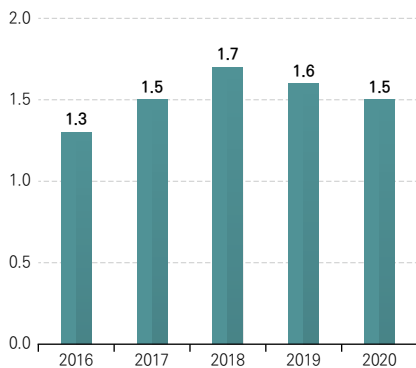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이 자산의 97.5%를 차지하며, 대부분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의 경우 고속철도 자산의 국가이관, 자체보유 현금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자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12**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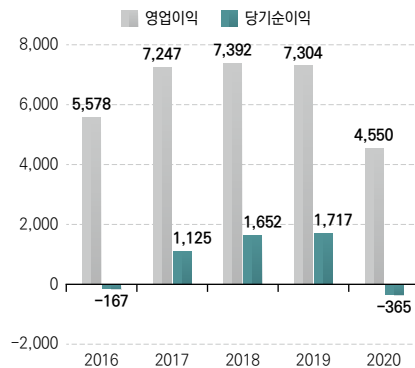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13**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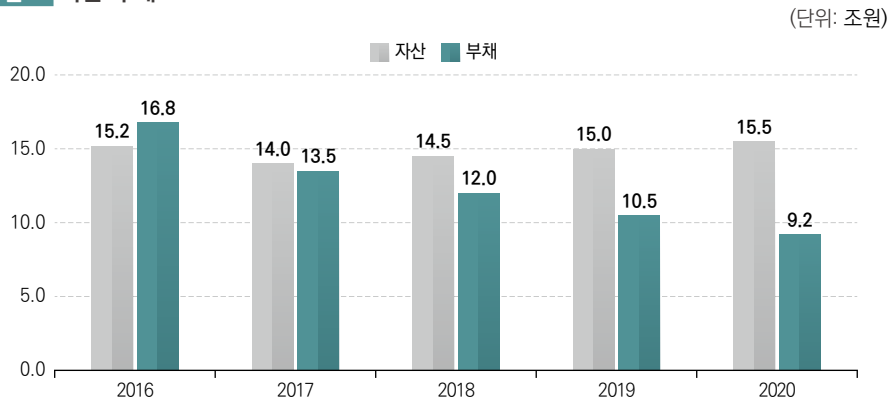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50~65%를 공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철도운행사(코레일, SR(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철도선로사용료로 징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영업수익은 선로사용료 및 임대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차감)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이자에 미

달하여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17년에는 철도운영자 경쟁체제 도입(SR 운영) 및 수서발 고속철도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선로사용료가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일반철도 선로사용이익 및 임대수익의 감소 등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로사용료 감소(37.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82억원 감소한 당기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하였다.

#### 4) 예금보험공사

2020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15.5조원, 부채는 9.2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7%, 총부채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14 자산·부채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채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2016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였다. 예금보험료, 파산배당, 이월자금 등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2017년에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예보기금의 순자산 부족 상황이 6년 만에 해소되었다. 이후 보험료지급 요인이 없어 보험료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용자산을 늘리고 발행채권을 상환함에 따라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15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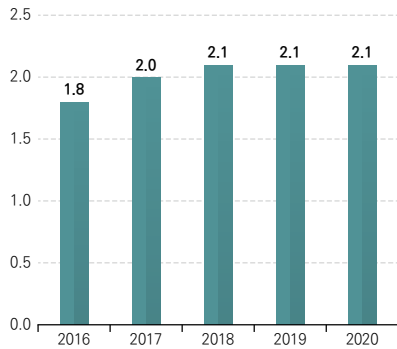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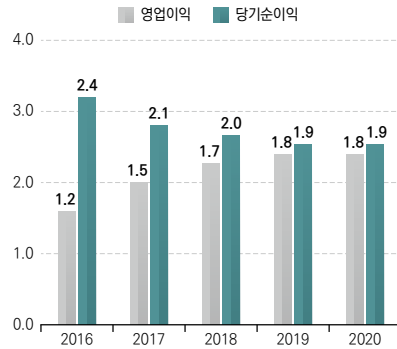


그림16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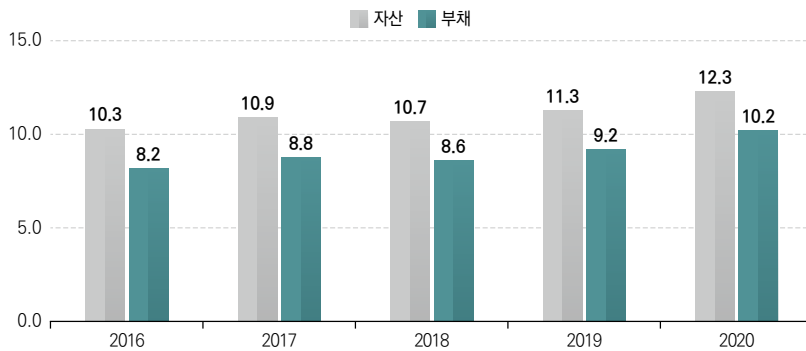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수익 및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은 증가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융부채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 5) 한국농어촌공사

2020회계연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은 12.3조원, 부채는 10.2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5%, 총부채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17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  
로 인해 자산이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18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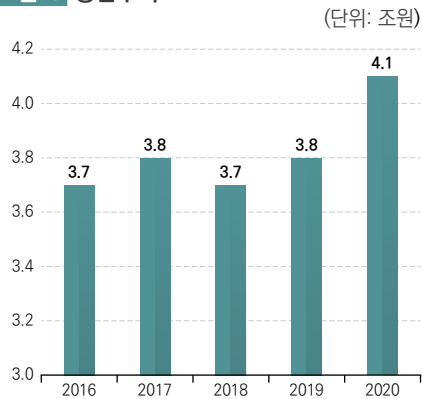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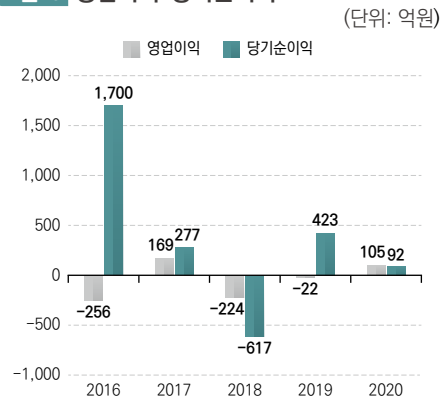


그림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관리 및 생산기반사업 등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매출이  
변동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구사옥 매각에 따라 일  
시적인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감소 및 법인세추납액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2019  
년에는 용수관리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매출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  
고,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스  
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 매출증가로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유형자산  
처분이익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32억원 감소한 92억원을 기록  
하였다.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법」 개정에 따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예정

## 01 「공익법인법」 개정에 따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예정



2021년 7월 27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익법인법」의 주요 개정 취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익법인법」에 비영리법인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으나 현재 공익법인 주무관청이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대부분(10명 중 7명)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표1**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사무기구	자체 사무기구를 두어 사무를 처리 (상임위원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직하여 사무기구를 관장 및 직원 관리)

출처 : 법무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보도자료, 2021. 7. 27.

기존 ‘공익법인’의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하고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 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민 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외에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과 공익법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에 맞는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전국적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형으로 집행할 것이다. 또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림1** 시민공익법인 맞춤형 지원



출처 : 법무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보도자료, 2021. 7. 27.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공익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 중 공익목적사업(학술·자선,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 권익신장 등)을 운영하여 시민공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와 차이가 크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공익법인은 4천여 개 정도라고 하였으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세법상 공익법인은 3만 9,897개(2019년 기준)로, 그 규모 차이가 10배가량에 달한다.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면 모든 공익법인을 총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익법인의 10%만을 관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등)이 시민공익법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민공익위원회가 모든 공익법인의 총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오피니언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이사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김상노·조광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2021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국가회계 재정통계』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 서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되며, 노년부양비<sup>18)</sup>는 2066년에 101.8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sup>19)</sup>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2020)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령인구 부양비율<sup>20)</sup>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8)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통계청)

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20)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자료를 바탕으로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산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부의 재무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재무제표의 현황 분석

국민연금기금의 과거 10년간 기금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1년 31조 4,847억 원에서 2020년 45조 9,396억 원으로, 14조 4,549억 원 증가하였다. 2020년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가 연금수급자보다 많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수입이 연금지급액보다 커서 기금 재정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재정전망인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 연금제도는 5년 전에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동일하지만, 인구 및 경제변수 등이 달라지면서 연금소진 시점이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나타났다.

**표1** 2011~2020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자체수입(A)</b>	418,204	456,835	470,466	490,307	511,120	537,399	590,925	617,512	662,516	723,935
<b>연금보험료 수입</b>	274,346	301,277	319,067	340,775	364,261	390,359	417,849	443,735	478,001	512,171
<b>운용수익 등</b>	143,858	155,558	151,399	149,532	146,859	147,040	173,076	173,777	184,515	211,764
<b>사업비(B)</b>	99,539	117,235	133,948	140,328	154,487	172,674	192,892	209,436	230,102	259,355
<b>기금운영비(C)</b>	3,818	3,991	4,015	3,962	4,020	4,643	4,745	4,939	5,019	5,184
<b>기금재정수지(D)</b>	314,847	335,609	332,503	346,017	352,613	360,082	393,288	403,137	427,395	459,396

출처: 2011~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재구성

국민연금기금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의 측정 없이 현금 주의로 인식된 이익이 잉여금으로 순자산에 적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회계연도 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834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83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순자산은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회계처리지침 문단 35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미래 지급의무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0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7조원이다. <표1>의 2020회계연도 기금수지 45.9조원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수익(연금보험료수입)에서 비용(연금급여전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비용(연금급여적립금전입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상대되는 대변에는 기금의 순자산(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기금의 재무제표는 미래현금 유출 예상액에 대한 측정이 없어(연금미지급금만 계상), 인구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복식부기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비용 상대계정을 순자산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다. 해외 주요국 사회보장성 연금 재무제표 사례 적용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보장성 연금제도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를 국민연금기금 재무제표에 적용하여 금액적 효과를 산출해 보았다.

사회보장성 연금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보고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한 국가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만 보험료 수납액 중 연금 급여를 초과하여 적립된 기금을 예수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에서는 해당 연금기금이 완전적립식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2 해외공적연금의 보고체계 요약**

특성 및 보고방법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b>관리주체</b>	사회보장청	노동연금성	후생성	사회발전부
<b>적용회계기준</b>	연방재무회계기준서 제17호 “사회보험회계”	국제회계기준	국가재무서류 가이드 북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b>재무보고체계</b>	총당부채 미인식, 사회보험보고서를 통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보고(75년)	총당부채 미인식	보험료 수납액 중 연금 급여를 초과하여 적립된 기금을 예수금 인식	총당부채 미인식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국 재무보고 방법 중 우리나라와 다른 보고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과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결과<sup>21)</sup>는 다음과 같다.

### 1) 미국

이 개선안의 적용 방법은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과 연금 급여 지출의 현금흐름에 대한 순현재가치를 주재무제표로 추가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할 경우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을 비교환거래 기금으로 분류하여 미래 지급할 연금급여 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게 되지만, 미래에 이행하여야 할 현금흐름 부족액의 현재가치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여주게 된다.

산출한 결과 2013년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는 △1,412조원이었으나, 2018년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는 △3,281조원으로 1,869조원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 이외에 할인율의 변동 효과도 있는데, 할인율 변동 효과를 제외(2018년 할인율을 2013년 현금흐름에 적용)하면, 2013년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는 △2,651조원이 산출되어 2018년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이는 630조원이 산출된다. 즉 2018년 적용한 할인율 기준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5년 동안 630조원의 현금흐름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제표는 제3차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되었던 시점인 2013년과 20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인구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채 등의 변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각각 2013년과 2018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 2) 일본

현재 국민연금기금에 수납된 보험료에서 당해 연도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일반회계에 전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연금보험료 수입액과 급여지출액과의 차이를 추가로 비용(연금급여적립금전입액) 처리한 후 순자산 증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순자산 증가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예수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재분류 결과는 <표3>과 같다. 이 경우 2013년 대비 2018년 부채가 109조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또한 147조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정확한 부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의 변화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표3** 예수금 분류 방법 적용 시 기금 재정상태표 변화

(단위: 십억원)

구분	2018년		2013년	
	분류 전	분류 후	분류 전	분류 후
부채	130	351,746	716	242,503
순자산	638,781	332,165	426,954	185,167

##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 완전 적립식 적용

이 개선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완전적립식이고, 보험계약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제42호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완전적립식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자격조건 미충족으로 연금수급권은 없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해 미래 이행하여야 할 연금지급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누락 없이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여 보았다.

현재 가입자에 대한 미래 이행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과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미수급자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발생한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연금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연금충당부채를 시범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므

로 연금충당부채가 적게 산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2013회계연도와 2018 회계연도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수급자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4 2013회계연도 대비 2018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변동**

(단위: 조원)

구분	2018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증감
수급자	251	127	124
가입자	1,672	1,094	578
합계	1,923	1,221	702

<표4>에서의 변동액은 인구변동뿐만 아니라 할인율의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가 발생하는데, 2018회계연도 할인율로 2013회계연도의 현금흐름을 할인할 경우 1,592조원이 산출되며, 이때 2018회계연도 증가금액은 331조원이 된다. 이는 가입자 수의 증가로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즉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된 1,923조원과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671조원을 감안하면, 1,252조원(671조원 - 1,923조원)의 기금적립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의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와 큰 차이가 있으며, 연금기금의 고갈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보여줄 수 있다.

## 라. 결론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제표는 현금주의 기준의 인식방법과 다르지 않고, 일부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원리에도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 결과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 규모가 83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필수보충정보로 보고되고 있는 장기재정추계는 매년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정보일 뿐이며, 재정고갈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무제표 보고일 현재 국민연금기금 부족액이 얼마이며, 향후 얼마만큼의 연금지급 이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 센터 동향



-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 안내
- 「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최종보고회



##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공회계부문의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회계통계센터 및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공공회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회계 포럼’의 외부 전문가로 전 홍익대학교 김경호 교수(위원장), 경북대학교 권선국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센터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외 2명, 지방회계통계센터 김연중 센터장, 양영철 기획조정실장, 신유호 연구기획부장, 박정규 통계관리부장, 이계형 선임연구원, 지성현 과장이 참석하였다.

###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 참석자 현황

- 자문위원(4): 김경호 교수(전 홍익대학교), 권선국 교수(경북대학교),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 지방회계통계센터(6): 김연중 센터장, 양영철 기획조정실장, 신유호 연구기획부장, 박정규 통계관리부장, 이계형 선임연구원, 지성현 과장
- 센터(5):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최은혜 연구원, 오예정 회계사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은 2021년 7월 26일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원가분석 컨설팅 활성화 방안,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계획,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원가분석 컨설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아웃소싱 기반 재무분석 원가분석 플랫폼 구축

- (목표) 전국 243개 지자체(공사·공단) 재무·원가분석 실시 및 DB 구축
- (단계) 플랫폼 운영을 통한 사업 효율화·확대 추진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무 원가분석 컨설팅 추진단(가칭) 구성 ⇨ 플랫폼화
2022~23년	아웃소싱을 통한 지자체 재무·원가 분석 대폭 확대 ⇨ 30개 목표
2024년~	재무지표·원가분석 전문기관 도약 ⇨ 전국단위 분석(100개 이상) 및 DB화

### 주요 토론 내용

**김완희** 분석 1건당 소요되는 인원과 시간, 지자체 수요 여부와 재원(단가), 지자체 규모별(기초, 광역) 분석 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성현** 프로젝트당 3개월, 1인당 4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아웃소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김봉환** 인력 풀(Pool)을 만들게 되면 정부·지자체 회계 분석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러 팀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는 경우 통일성 있는 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로 하는 30개 정도의 수요가 창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홍보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성현** 김봉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통일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분석기법 공유와 수요창출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 중이다. 보고서를 단순한 형태로 하여 분석틀을 제공할 것이며, 무상 컨설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는 원가분석추진단 발족식을 언론에 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확보하고자 한다.

**권선국** 김봉환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며, 유상으로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자발적 수요가 창출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미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질의드리며, 반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향후 홍보에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지성현** 원가분석은 시설요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레 개선까지 가는 성과가 있었으며, 재무분석은 의회 요구자료 대응으로 사용되어 매년 분석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석**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자료 작성과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컨설팅과 각 지자체가 처한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성현**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요구사항이 다른 측면이 존재하며, 공통적인 문제점 도출도 필요하나 2~3개로는 비교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사용자 분석 용역 등의 경우에는 수요에 맞추어, 공통된 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의회에 제공 가능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소영**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확대·표준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분석과 관련한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인 분석 사례가 존재하였는지 질의드린다.

**이계형** 앞으로 도전할 과제로 생각하나, 성과평가와 원가정보 간 연계에는 접근하지 못했고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 코로나 위기가 닥치고 회계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지출조정하는 근거를 재무분석 컨설팅 쪽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30개 재무지표의 비교분석 또는 시계열분석 중심이었으나 예산편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를 활용해 보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며,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 나.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계획

### (주요 내용) 세미나 개요

-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14:00 ~ 17:30(예정)
- (장소) FKI Tower(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예정)
- (참석자)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및 학회
- (주요 내용) 지방재정·회계 현안 및 센터 중장기 로드맵 발표 및 토론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재정 운영 방향
  -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성과 및 발전방안

### 주요 토론 내용

**김경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세미나 개최 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봉환** 세미나 개최 시점에 대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상축사에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존재하므로 축사 대신 사례 발표를 넣는 것을 제안드린다.

**김경호** 시기적으로 지방회계통계센터를 국제적으로 알릴만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국제심포지엄처럼 일본 등 해외사례 발표 또는 초청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린다.

**최원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병행하며 존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잘 운영하면 세계적으로 알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제도운영 사례를 잘 정리하여 해외에 잘 알리는 것도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선국** 세미나의 다른 주제도 중요하지만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 후 5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잘 정리한다면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유호** 그동안의 성과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

## 다.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 (주요 내용) 심포지엄 개요

-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 3일(수)
- (장소) 서울 더 플라자, 오키드 홀
- (참석자) 한국(조세연, 기재부 및 정부부처, 학회, 국회(NABO 등)), 영국(1), 캐나다(1), 오스트리아(1), 뉴질랜드(1), 호주(1), 프랑스(1), 스위스(1), IPSASB(1), OECD(1) 등 총 50명
  - 대면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 ‘한국어 및 영어’로 동시통역 제공
- (주요 내용) 국가별 재정위험 및 자산관리 현황(모범사례)
  - 재정위험의 식별 및 관리
  - 자산과 부채 관리

### 주요 토론 내용

**김봉환** 국제심포지엄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개최된다면 정부회계 관련 심포지엄으로 잘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사례 발표가 없다는 점이 아쉬우며 우리나라 사례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소영** 한국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이나, 재정위험관리에 발생주의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재정위험관리는 우수한 수준이나, 자산부채관리는 기획재정부와도 관련이 있고 사례가 없다고 하거나 과대포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최원석** 공격적이고 개선해야 하는 주제를 선정한 점이 도전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며, 국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변형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심포지엄이 세계적 전문가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면 좋겠고, 지방회계통계센터도 역할 분담하여 서로 상생·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선국** 발생주의 산출 정보 활용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재정위험관리와 자산관리 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것이 의미 있고 좋은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봉환 교수님 의견처럼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발표하는 것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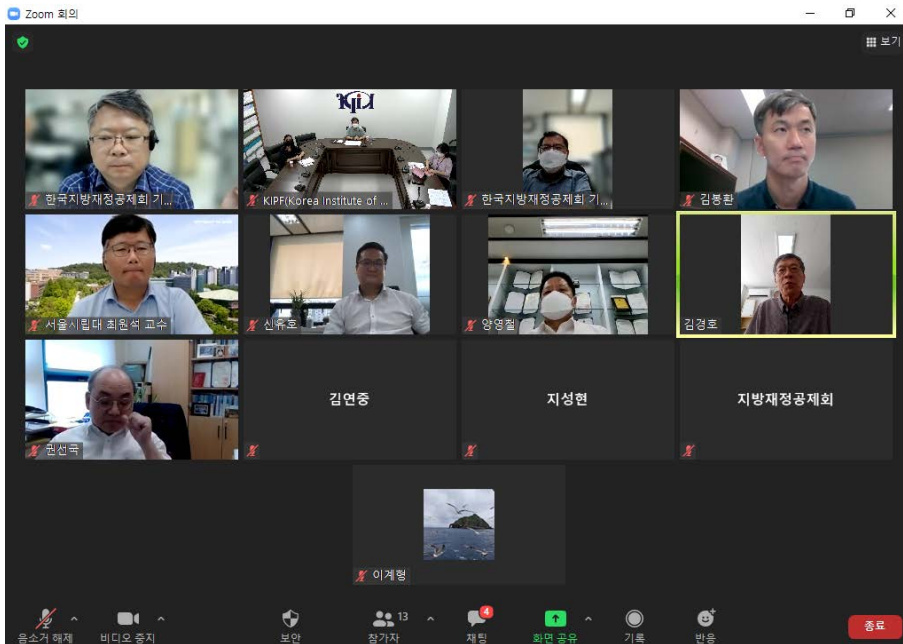
**문창오** 한국사례 부분은 현재로는 고민 중인 상황인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이 발전적일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고, 가능한 주제를 발굴하여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경호** 해외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완벽히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의 자산부채관리 사례를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회계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도 양 센터의 협조를 위한 것이므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양 센터가 협업할 일이 없는지 논의해 보기를 제안드린다.

**최원석** 두 행사가 나누어져 계획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협조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김경호 교수님 의견에 동의한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께서 발생주의 회계보다 더 큰 틀(ESG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셔서 5주년 행사로 카테고리를 좁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사장님과 소통하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호** 향후 장기적인 방향을 협업하는 것으로 잡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1년 제2회 '공공회계 포럼' 온라인 회의 캡처 화면(7. 26(월))



##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2021년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재정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정위험과 자산·부채 관리를 세부 주제로 하여 진행된다. 발생주의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이미 발생주의 제도가 정착된 다수의 국가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산출된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본 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재정위험 식별과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해외 7개국(영국,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의 발생주의를 활용한 모범사례 및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이 9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심포지엄이 구성되었다. 각국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차: 2021년 11월 2일 (화) 15:00~17:15

시간	내용	발표자
<b>[개회]</b>		
15:00~15:10	개회사	<b>김재진</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b>한경호</b>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15:10~15:20	기조발표	<b>김완희</b>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b>[국가별 주제발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b>		
15:20~15:35	영국	<b>Manj Kalar</b> , Kalar Consulting 대표
15:35~15:50	호주	<b>Mike Blake</b> , IPSASB 위원(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15:50~16:05	오스트리아	<b>Bernhard Schatz</b> , IPSASB 위원
16:05~16:20	스위스	<b>Marc Wermuth</b> , IPSASB 위원
16:20~16:25		휴식
<b>[토론]</b>		
16:25~17:15	토론	좌장: <b>김봉환</b>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b>Ivor Beazley</b> OECD 예산공공지출국 재정관리보고팀장 <b>Thomas Müller-Marqués Berger</b> IPSASB CAG 의장 <b>이은경</b>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b>장윤정</b>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b>한종석</b> 아주대학교 교수



• 2일차: 2021년 11월 3일 (수) 14:00~16:10

시간	내용	발표자
<b>[개회]</b>		
14:00~14:05	주제소개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팀장
<b>[국가별 주제발표]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 자산·부채 관리</b>		
14:05~14:20	영국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14:20~14:35	뉴질랜드	ThuPhuong Truong,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교수
14:35~14:50	캐나다	Brian Pagan, Capital Perspectives 대표
14:50~15:05	프랑스	Fabienne Colignon,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CNoCP)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15:05~15:10		휴식
<b>[토론]</b>		
15:10~16:00	토론	좌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재정관리보고팀장 Thomas Müller-Marqués Berger IPSASB CAG 의장 강우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팀장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남우점 감사원 결산담당관
16:00~16:10	폐회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 확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웹심포지엄으로 진행될 본 행사는 11월 2일 15:00와 11월 3일 14:00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gafsc-seminar.kr>





## 「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준정부기관 재무정보 개선방안 연구」 착수에 앞서 준정부기관의 재무정보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묻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센터의 발제자료 발표에 이어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와 배성규 이사(대현 회계법인), 김상노 이사(한길 회계법인)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 발제 주요 내용 요약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일종의 정부대리인 역할을 함에도 K-IFRS 도입으로 민간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사업의 성과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의견제시
  - ① 준정부기관 K-IFRS 적용상 한계
    - 준정부기관은 K-IFRS 적용으로 인한 효익이 낮으며, 정보이용자에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음
  - ② 준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측면(IS 중심)
    - 기관의 정부예산 집행 목적 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의미가 없음. 오히려 수탁사업의 집행내역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석 개편할 필요
  - ③ 예산정보와 결산정보의 연계 및 통합 필요성
    - 매출액에서 정부지원 비중이 높은 기관이 대부분으로, 예산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예산정보와 결산정보를 연계할 필요성(예산정보와 결산정보를 별도로 작성하되 하나의 결산서 세트로 구성하거나, 주석에 예산정보 연계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
  - ④ 준정부기관 재무정보 공시측면
    - 기관의 사업성과 및 사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필요성과 나아가 정책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공시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 일반목적 재무제표라는 기본원칙에서 생각할 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예외일 수 없음(일반목적 재무제표와 특수목적 재무제표는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
  - 만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K-IFRS를 적용하여 정보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석이나 기술적 설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공시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K-IFRS 재무제표에 예산정보 등을 담는 것은 정보의 목적적합성이나 이해가능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음(결산개요 등의 별도의 부속서류 제공하여 정보 추가 전달 가능)
  
- (배성규, 대현 회계법인 이사)
  - K-IFRS는 자본시장 이용자를 위해 개발·적용되는 기준으로 위탁집행형 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예산에 대하여 자원별(출연금, 기금전입, 수탁사업, 기부금 등)로 구분표시하고, 비용도 수익에 대응하도록 계정과목을 정비할 필요
  - 주석공시 개선을 통해 예산 수령과 집행내역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위탁집행형 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회계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현재는 K-IFRS,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이 혼재되어 사용)
  
- (김상노, 한길 회계법인 이사)
  - 준정부기관의 K-IFRS 적용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비재무적인 효과(업무프로세스 정비 및 선진화, 지배구조,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회계기준 전환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준정부기관 재무제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먼저 식별하고, 이를 산출하는 방안을 찾는 top-down 방식의 접근 필요
  - 예산정보와 재무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두 가지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에서 제공했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알리오에 공시되고 있는 정보의 요약 및 비교 제시 등 공시형태 개선을 통해 공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김완희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리를 마련함
  - 일반목적 재무제표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제안하였음
  
- (문창오 부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 아닌, 정부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K-IFRS 적용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제약되고 기관의 핵심 사업의 흐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정부예산사업을 구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정부자금의 꼬리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재무제표나 주석 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

### 토론 주요 내용 요약(계속)

- (박윤진 팀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싶었음
  - 준정부기관의 K-IFRS 적용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
  - 정보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간담회(9. 1.), 본원1층 107호 영상회의



##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관련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었다. 예산편성에 따라 센터에서는 2022년 결산교육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교육체계를 확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외부 위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연구는 교육대상자를 식별하고 대상자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규안 교수(송실대학교), 배성규 이사(대현 회계법인), 선우희연 교수(세종대학교)로 구성된 연구진이 2021년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중 비영리법인과세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매월 1회 1가지씩의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비영리법인과세분과의 연구진은 박성환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공동연구 박진하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공동연구 전필건 언론인),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 월례회의는 2021년 7월 16일 13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로 이루어졌다.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로 최호윤 더함회계법인 회계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박재현 한서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에 대한 현행 규정, 해외사례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보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의 제한, 의결권의 제한, 공익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등 공익법인 주식보유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제5차 월례회의는 2021년 8월 13일 13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로 이루어졌다.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이 참석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통합시스템의 활성화, 주무관청 담당자 교육 및 전담조직 신설, 제출서류 중복 간소화 등 공익법인의 중복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21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제5차 월례회의(8. 13.), 본관 7층 대회의실





##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최종보고회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최종보고회는 2021년 9월 10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에서 개최되었다. 박성환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규안 송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공동연구 전필건 언론인), 최호운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등 연구진이 참석하였으며, 각자의 연구주제에 대해 최종 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였다.

### 비영리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박성환**  
(한밭대학교)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규안**  
(송실대학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

**박진하**  
(송실대학교)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학교법인 세제상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

**최호운**  
(회계법인 더함)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첫 번째 주제인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박성환 교수가 발표하였다. 종교단체 및 종교인은 국세·지방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조세의무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 적용됨으로써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종교단체 및 종교인 세제혜택의 제공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혜택에 대한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세제상 의무사항에 대해 예외를 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에 대해 전규안 교수가 발표하였다. 먼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 유형선택이 부정확하거나 공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공익법인들이 공시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공익법인 공시의 관리·감독에 대해 정정내역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시양식과 공시 관리·감독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관련 공시의 목적 설정과 인식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 변영선 회계사가 발표하였다. 현재 공익법인 관리·감독은 관련 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 국세청·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역량,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중복서류와 중복절차 등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공익법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아웃소싱 등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인 ‘공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발표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학교법인 세제상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비영리 국내법인에 해당되며,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세제상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적정 적립·사용 등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법인의 세제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처별 통합 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학교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 최호운 회계사가 발표하였다.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역할을 하는 소유주식에 대한

지분을 규제는 우회적 지배구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식을 기부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우회적 지배구조 요인을 방지하되, 주식 보유 의도에 따라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학교법인 세제상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세제혜택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의무면제 혜택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이런 혜택을 점차 회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학교법인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법인에서 종교단체를 제외시킨 특별한 명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원교차로<sup>22)</sup>’ 사건을 소개하며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직화된 현행규정이 착한증여를 막고 있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2021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최종보고회(9. 1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팰트홀

22)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가 설립한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자 국세청이 장학재단에 140억원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으로,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다는 「상증세법」에 따른 조치



# 세미나



-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 가. 개요

- 대주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일 시: 2021. 8. 20.(금) 13:30~2021. 8. 21.(토) 12:10
- 장 소: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 <주제발표 및 토론>

#### [국가회계연구 네트워크 세션]

[사 회] 최용락(숭실대)

[발표1]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방안(차상권, 한양대 박사)

[토 론] 조형태(홍익대)

[발표2] 국가회계에 현금흐름표 도입 연구(문창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 론] 노희천(숭실대)

[발표3]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김봉환, 서울대)

[토 론] 윤성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과 회계의 난제들과 해법 세션]

[사 회] 정창훈(인하대)

[발 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토 론] 한소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대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세션]

[사 회] 김태동(차의과학대)

[발 표]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관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최연식, 경희대)

[토 론] 박성환(한밭대)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국가회계연구 네트워크 세션]

###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1 국가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방안(차상권, 한양대 박사)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이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무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발생주의 도입 당시 기존의 예산회계에서 제공하지 않던 국가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산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사례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연계성의 핵심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사점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표2 국가회계에 현금흐름표 도입 연구(문창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서는 프로그램별로 작성되므로 국가의 현금흐름이 양호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하고 있지만 활동별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하므로 현금흐름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표 작성기준에 대하여 ① 기존의 결산보고서 내 현금흐름정보를 나타내는 타 보고서의 개선 및 존치 여부 ②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직접법, 간접법) ③ 현금흐름표상 활동별 표시 방식 ④ 현금흐름표상 활동별 분류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별 현금흐름'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각각 작성하여 서로 비교·검증하는 방식의 현금흐름표 작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를 시범 작성하여 작성 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금흐름표를 통해 ① 정부의 활동별 지출 모니터링 강화 ② 정부 현금흐름의 질에 대한 정보 제공 ③ 미래의 현금흐름 예측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발표3**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김봉환, 서울대)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계산 실수, 수치 누락 등의 회계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오류는 주로 자산 평가 또는 누락, 취득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오류 중 자산을 중심으로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국가 결산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오류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회계오류사례를 유형별(자산 누락 오류, 자산취득 및 보유금액의 회계 오류,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로 분석하여 각 사례별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국가결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 결산담당 공무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 민간회계법인, 감사원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 토론 내용****토론1** 국가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방안(조형태, 홍익대)

현재 연구초기단계로 파악되며 추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보완 및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현 연구제목(국가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방안)이 너무 포괄적이며, 국토교통부 사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연계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와의 연계성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토론2** 국가회계에 현금흐름표 도입 연구(노희천, 숭실대)

현금흐름표를 통해 현금정보 제공의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같은 현금흐름표 작성 목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 현금흐름표는 지출별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가통합 현금흐름표는 전체적인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파악이 중요하므로 현금흐름표 작성 시 목적에 따라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금흐름표상 활동 용어에 ‘영업활동’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검토가 필요

하고 투자활동의 범위에 장기적인 기금적립 운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와 국가회계에 따른 현금흐름표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여 국가회계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활용방안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금흐름표 도입 시 오히려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표 도입 시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토론3**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  
(윤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순환 보직 등의 문제로 인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 어려우며, 디브레인 시스템상에서 예산결산에 연계되어 재무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재무결산의 중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연구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재정과 회계의 난제들과 해법 세션]

• 주요 발표 내용

**발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노년부양비 증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영국·뉴질랜드·일본·IPSAS 등 해외 주요국의 국민연금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미국 재무보고 모델을 적용하여 주재무제표로 사회보험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2안은 일본 재무보고 모델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급여지출을 초과한 보험료 수입을 예수금으로 표시하는 방안이며, 3안은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제42호 사회적수혜의 보험접근법을 적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가지 개선안에 대하여 제3차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되었던 시점인 2013년과 20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고, 재무보고의 유용성 증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 • 주요 토론 내용

##### 토론 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 관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별로 실제 금액을 산출해서 이를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안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부족현금(기금적립금) 규모에 대해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재무회계적 접근방법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측정 및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 2안의 경우 일본 재무보고 형식의 예수금 표시방식은 향후 미래지출의무를 부채로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수금 규모(332조원)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3안인 IPSAS에 따른 보험접근법의 경우, 충당부채 인식방안 적용을 위해 보험계약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 중 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고려 ② 총납부기간(45년)에 대한 가정과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18세 이상)의 배치 ③ 현 수급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충당부채 적용하는 방안 고려 등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대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세션]

####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관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개선방안: 연결회계 적용 사례 (최연식, 경희대)

2019 회계연도 말 국가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투자증권은 국가 총자산의 39.2%이고, 이 중 지분증권이 81.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지분증권과 정책적 목적으로 공기업에 출자한 출자금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회계적 관점에서 국가와 공기업은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국가재무제표가 공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업출자금에 연결회계를 적용하여 국가 연결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본 결과 자산 및 부채 등 재정상태표의 주요 항목은 연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만, 프로그램순원가 및 재정운영순결과 등 재정운영표 주요 항목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기업출자금에 대해 연결회계를 적용한다면, 연결과정에 활용되는 핵심적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공시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결범위에 포함된 회계실체 간 공시정보가 직접적으로 상호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 • 주요 토론 내용

#### 토론 박성환, 한발대

현재의 공기업출자금 회계처리 및 공시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기업출자금에 대한 연결회계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연결회계 도입이 유일한 대안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석이나 보충명세서 등을 통해 공기업출자금 관련 상세정보의 제공으로 보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정보 수요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행정형 회계실체인 국가와 기업형 회계실체인 공기업(시장형 상장기업)의 연결회계정보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흑자를 보고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가의 재정운영성과에 연결하여 재정운영결과가 양호해지고,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연결하여 국가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정보의 수요가 있을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8. 20.), 축사 및 발표

국가회계  
재지통계



## 공지사항



###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mailto:gafsc@kipf.re.kr)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